

# 2019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문화정책 토론회

2019.10.11(금) 13:30~16:30

노보텔 앰버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B1 그랜드볼룸



## 2019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문화정책 토론회

소개 및 인사	13:30~13:40 (10분)	진행 :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
준비토론	13:40~14:20 (40분)	공통질문을 중심으로
제1섹션	14:20~15:00 (40분)	<p>“혁신적 포용국가, 문화정책의 포용성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신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li> <li>·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li> <li>·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li> </ul>
휴식	15:00~15:10 (10분)	휴식
제2섹션	15:10~15:50 (40분)	<p>“혁신적 포용국가, 문화정책의 혁신성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병민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li> <li>· 전성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li> <li>· 정종은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li> <li>· 한종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li> </ul>
종합토론	15:50~16:30 (40분)	플로어질문 및 의견
폐회	16:30~	폐회



공통질문

**제1섹션** 혁신적 포용국가, 문화정책의 포용성 확대

박신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3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11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1

공통질문

**제2섹션** 혁신적 포용국가, 문화정책의 혁신성 확대

이병민	건국대학교 교수	31
전성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39
정종은	상지대학교 교수	45
한종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55



# 공통질문 + 제1섹션

혁신적 포용국가, 문화정책의 포용성 확대

박신의...3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장세길...11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최현수...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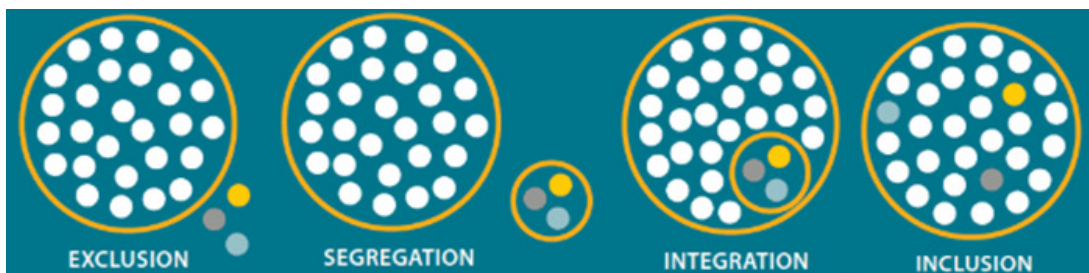
박신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 [공통 질문]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문화정책”



아래의 그림은 포용적(포괄적) 교육과 관련하여 사용된 정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을 문화정책적 관점으로 본다면, 현재 한국사회는 어디에—① 배제, ② 분리, ③ 통합, ④ 포용—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사회가 배제, 분리, 통합, 포용의 어느 유형에 있다면, 향후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데 사회적 또는 정책적 장애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UN(2016),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eneral Comment No. 4

**A** 현재 우리 사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배제와 통합 사이에 있다고 보고, 그 가운데 배제 방향에 더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비교적 순혈적 맥락을 유지하다가 점차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다는 점에서 통합에 대한 의지나 노력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배제 논리가 암암리에 작동하면서 심각한 갈등과 분열, 차별과 불평등 양상을 보이는 현실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 폭력이나 왕따문화, 장애인과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외국인 노동자 및 탈북자 차별과 혐오, 갑질과 막말, 문지마 폭력과 성폭행 등이 주요 현상이라 하겠다.

문화적 관점에서 보자면,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배제는 다른 이의 삶, 생각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인지, 관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서 오는 것인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 실천적 수위가 낮다는 판단이며, 바로 이 지점이 포용을 이루기에 가장 근본적인 장애요인이라고 본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혁신과 포용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며,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여서 혁신적인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포용은 혁신능력을 높이고, 기술 혁신의 결과(배제)를 보완해주는 상보적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문화정책에서 포용과 혁신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토론자 역시 혁신과 포용이 상보적 관계에 있다고 본다. 포용은 ‘배제’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어서, 포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제한다. 포용의 관점으로 사회문제를 다시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까지 빈곤과 결핍, 격차 개념으로 사회문제를 바라보던 관점을 넘어섬을 말한다. 우리사회는 글로벌화, 탈산업화로 인해 단순히 실업자와 빈곤층만이 아닌 이민자나 고령화로 인한 노인층, 장애인, 성소수자, 청년빈곤층,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정책대상이 발생하였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로 인해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포용은 이전의 빈곤 개념으로 해소될 수 없었던 지속가능한 불평등에 천착하고, 경제적 결핍만이 아닌 다차원적 삶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배제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사회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면서 인간의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포용이 우리 사회의 분열과 통합을 저해하는 배제를 인식하고 극복하는 전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 가치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을 수반한다고 본다.



문화비전2030(2018.05)과 혁신적 포용국가(2018.09)의 연계지점 및 상호역할 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정부가 내세운 ‘혁신적 포용국가’에서 혁신은 포용국가에 대한 형용사로 사용되어, 포용국가를 혁신적으로 이루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그 자체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아젠다를 보면, 혁신과 포용이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고 마치 두 개의 목표처럼 이해하게 되는데, 이는 포용이라는 단어를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포용은 ‘배제’(exclusion)의 상대적 개념으로, 포용을 거론함에 있어 배제 논리로 사회문제를 바라보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혁신적 포용국가’를 내세워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한다면 그 어떤 논의에서도 사회적 배제로 인한 현재의 사회적 분열과 갈등, 차별과 불평등의 현상은 언급되지 않고, ‘포용’은 정부의 ‘보살핌’의 맥락에서 막연한 ‘사람’ 중심의 선의적 정책으로 일관하거나 여전한 ‘성장’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 가운데 혁신적 포용국가 구도에서 제시한 문화영역도 문화적 배제로 인한 사회 갈등과 차별의 현실을 전제로 한 아젠다가 아니라, 체육관이나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과 같은 기반시설에 집중되어 있는 수준이다.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문화와 여가가 있는 생활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동네 가까이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와 같은 보편적 문화권이 강조되는 가운데, 포용국가에 대한 정의도 “나라다운 나라는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sup>1)</sup>로 제시하고 있어 배제로 인한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 구조를 비판적으로 넘어서겠다는 정치적 입장이 보류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은 문화비전2030에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문화비전 역시 포용에 대한 접근을 배제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하지 않고, 포용 개념에 따른 기존 정책 용어와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여전히 ‘빈곤’과 ‘기회의 확대’ 수준에서 접근하는 일반적인 문화진흥의 구도에 따르고 있어 뭐가 새로운 것인지를 알 수 없게 한다. 그나마 가능한 주제라 할 문화다양성이나 성차별 관련 비전마저도 크게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의제4)에 예술창작대가나 문화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 문화콘텐츠 유통 불공정 개선 등을 배치하거나, ‘성평등 문화의 실현’(의제3)에는 성차별·성폭력 없는 문화생태계 조성이나 여성친화적 생태태 및 성평등 정책에 그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포용국가와 문화비전은 배제를 전제로 한 포용이 아닌 상태에서, 한편으로는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경향과 ‘성장’ 논조를 위해 문화자원에 대한 기술과 지식 융합과 일자리 개념을 연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두 개 차원을 결합하거나 연계성을 성립시킬지 난감한 상황이다. 만일 추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안한다면,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다. 첫 번째로는 혁신적 포용국가와 문화비전의 접목을 사실상 「차별금지법」<sup>2)</sup>을 기조로 하는 가운데 부여되는 전체적인 철학과 관점에서 포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sup>3)</sup> 그리고 이를 문화비전에 담을 시, 문화다양성 구현과 포용적 예술과 관련한 논의로 연결하되, 본질적으로 문화에 대한 포용적 관점에서의 해석으로 재배치되면서 전면적인 차원에서의 포용적 관점의 적용을 고민할 수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는 포용적 혁신국가가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를 이루려는 아래로부터의 움직임과 역량을 중심으로 공동체와 거버넌스를 이룬다는 기조를 살리는 방안이다. 그리고 이를 문화영역으로 연결하면서 정부 주도 지원사업에서 벗어나, 예술가의 자립기반 형성과 민간 섹터의 문화 역량 강화를 부각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1) 성경룡 외(2017),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 모두를 위한 국가, 약자를 살리는 세상을 위하여』, 21세기북스

2) 성별, 성적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3) 2017년 10월 9일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2009년에 이어 재차, 성별·연령·인종·장애·종교·성적 지향·학력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였다.

## [세션 1] “혁신적 포용국가, 문화정책의 포용성 확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포용적’ 문화정책은 여러 가지 측면—① (기존, 새로운) 문화정책 내 포용(성)의 확대, ② 문화정책을 통한 사회의 포용성 확대, ③ 기타(①, ②와 다른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논의됩니다. 현 시점에서 이 같은 정책 가운데 어떤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점별(현재-중장기)로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A** 기본적으로 포용이라는 요구가 현재 우리 사회의 여러 현상을 염두에 둘 때 매우 절실하고 필요하며 시의적절한 쟁점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배제 개념에 기반한 포용 개념을 드러내면서 문화정책을 구현하고, 이에 따라 사회의 포용성 확대를 하는 접근이 적절하다고 본다.



포용적 문화정책, 문화정책의 포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사업 추진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정책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경제적 소외계층인지, 지리적 소외계층인지, 아니면 문화적 소외계층인지를 중심으로 말씀해주십시오]

**A** 사회적 배제 현상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극복을 전제로 할 때, 대상은 단순한 소외계층이 아니다. 실제로 경제적 소외계층의 경우는 배제에 따른 대상을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일테면 중산층(혹은 상류층)일지라도 장애를 가진 사람 혹은 동성애자, 빈곤층이라도 예술을 즐기는 사람, 직업을 가진 싱글 여성, 장애자이자 동성애자의 경우 등이 그럴 것이다. 지리적 소외계층은 중앙 중심에 의해 배제되는 지역, 그리고 지역에서도 더 배제된 곳, 지역을 출생지로 볼 경우의 배제, 외국인의 지리적 여건 등이 고려될 수 있겠다. 문화적 소외계층을 보면, 문제는 훨씬 복잡해진다. 문화적 소외계층을 단순히 문화를 향유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교육을 어느 정도까지 받았는지의 차이와 경제적 여건과 직업의 성격에 따른 차원, 생각과 취향의 차원 등 여러 층위가 고려되면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를 생각한다면 바로 문화 영역에서의 문제로 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포용적 문화정책, 문화정책의 포용성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생태계 구성원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예술인, 예술단체 및 기관, 일반 시민의 역할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A** 전반적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은 포용적 문화정책이 갖는 사회·문화·정치적 맥락을 잘 헤아려 사회적 배제에 따른 모든 현상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차별과 불평등, 갈등과 분열 등의 요인을 구조적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일테면 유럽의 경우 사회적 배제에 대한 천착은 197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 시작하여 1990년대 유럽연합에서 본격 도입하였는데, 특히 영국 노동당 정부는 1997년에 사회적 배제의 관점으로 사회 불평등과 차별, 갈등의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한 목표로 사회적 배제 부서(Social Exclusion Unit)를 설립한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포용적 문화정책은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한 바, 자발적인 시민사회와 예술인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포용국가를 위한 문화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보아야 할 (국내외) 문화 정책사업 사례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포용국가를 위한 문화정책의 핵심은 문화에 대한 포용적 관점의 해석이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문화’란 ‘지고지순의 가치’로 합의하면서 그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배제에 대해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오페라하우스나 콘서트홀, 극장,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시설이 일정한 계층에게 배제의 의미를 던질 수 있다는 점이나, 피에르 부르디외에 따라 계급적 불평등을 강고하게 하는 요소가 곧 문화자본이라는 맥락도 같은 논리다. 그런 점에서 문화의 민주화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일례로 프랑스 문화부는 모든 사람이 문화예술을 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접근성(accessibility) 강화에 중점을 둔 ‘문화의 민주화’ 정책을 펼쳤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인식을 1970년대부터 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매개(Médiation culturelle) 개념의 도입과 문화매개자(Médiateur culturel)라는 인력 개발을 시도하였다. 기본적으로 이는 관객들의 다양한 양상에 눈을 돌려(일테면 글을 못 읽는 사람) 박물관 지식과 경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되, 궁극적으로는 관람객 스스로 향유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또 영국에서는 노동당이 정권을 잡은 1997년 직후, 보수당 집권 이래 지속되어 온 경제난과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 포용 정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박물관의 접근성 문제를 사회적 참여와 배제, 포용의 맥락에서 거론하기 시작했으며, 1999년 레스터대학교(University of Leicester) 박물관연구소(The Research Centre for Museums and Galleries, RCMG)의 연구로 박물관의 사회적 포용 지표를 개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포용에 대한 박물관의 범위, 박물관의 사회적 영향 조사, 배제 관련 지표 제시, 사회적 포용의 우수 사례와 원리 제시, 포용과 관련한 섹터의 고유한 기여 제시 등이 이루어진 바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문화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정책환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사회환경보다 정책기획 및 집행을 둘러싼 환경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A** 기본적으로 포용적 문화정책은 시민사회의 성숙과 더불어 실천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배제로 인한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성숙된 시민사회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일테면 장애인을 그들 나름의 다른 삶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마음이란 정부나 기관에서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책기획 및 집행에서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의 문화정책(사업) 가운데 포용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주목해야 할 사업 또는 개선되어야 할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첫째로 향유정책에 대한 개선이다. 문화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고민이나 연구는 꽤 있었다. 일테면 향유정책 가운데 향유층 확대를 위해 시행한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무료관람이나 문화 바우처제도(문화누리카드), <문화가 있는 날> 등을 보자면, 이는 ‘빈곤’ 개념으로 접근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왜 박물관에 가지 않는가?’ ‘왜 오페라를 관람하지 않는가?’ 등의 비관람 동기 및 요인분석에서 단지 티켓 값만이 요인이 아니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오히려 ‘일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너무 어려워서’, ‘나의 삶과 상관없는 것이어서’ 등의 요인이 더 근본적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박물관과 극장,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등의 시설이 기본적으로 관람에 대해 일정하게 배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이 시설에는 배운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선입견이 비관람 요인이라는 사실이고, 이는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해서 해결될 수 없다는 데 포용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문화적 박탈감을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대한 기존 이념이나 주류 가치체계에 따른 배제로 이해할 때 해결점이 찾아진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 역시 ‘빈곤’ 개념으로 접근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일정하게 창작 준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결국은 예술가를 저소득층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이다. 하지만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의 죽음을 빈곤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혹은 보호망으로부터의 배제로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의 원인을 예술창작활동 자체가 사회적 노동 개념이나 구조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이해한다면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조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예술인 복지를 예술인이 감내해야 하는 물질적 결핍에 대한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 창작 활동과 예술인의 사회적 존재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해, 사회적 노동으로서의 창작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합의를

목표로 함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시 창작지원 체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창작지원금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예술의 존재가치를 높이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셋째로 장애예술과 성소수자, 문화다양성의 차원에서라면 포용적 관점은 매우 분명한 역할이 부각된다. 특별히 ‘포용적 예술’(Inclusive arts)을 장애인 관련 예술 및 정책 전반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한 영국의 경우는 중요한 참조점이 된다. 포용적 예술은 2006년 신노동당(New Labour)이 교육을 위한 ‘창의적 파트너십 정책’(Creative Partnerships Policy)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사용되었다. 창의적 파트너십은 문화 활동에서의 경제적 중요성과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의제에 기반한 결과(Hall and Thomson, 2007: 13)이기도 한데,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학교예술교육에서 사회적 포용을 옹호하고 모두를 위한 문화 향유를 강조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포용의 관점에서 장애인 예술을 접근함으로써 장애예술을 기존의 비장애예술에 준하는 예술이 아니라, 장애 자체에 대한 고유함과 특성을 또 다른 문화 영역으로 인정하는 문화다양성 원리와 결합을 하게 되면서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가 중심이 되어 이론 연구 및 예술적 수월성을 갖는 예술가 및 단체를 발굴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문화 향유를 위한 작품 감상 특별 프로그램 운영이나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역시 이에 준하는 사업이다.

나아가 포용적 예술은 ‘문화다양성’ 구도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영국예술위원회는 다양성 실천이 영국 예술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인식 아래 ‘모두를 위한 위대한 문화예술(Great arts and culture for everyone)’을 기관의 미션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창의성은 다양한 삶을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 속에서 다양성과 평등을 정책의 핵심으로 강조하면서 장애예술을 그런 맥락에 재배치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장애예술은 비장애의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한 언어이자 다른 삶이며, 따라서 이제까지의 비장애 중심의 미학과 다른 미학으로 해석되고 수용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하고, 이로써 이제까지 보호집단으로서의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게 되는 변화가 가능해진다. 나아가 예술위원회는 다양성 실천지표를 적용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sup>4)</sup> 동시에 공기관 조직에서 인종 및 성적 성향, 장애 등에 따른 다양한 삶을 지닌 인력을 고용하도록 권고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문화다양성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014년 제정된 <문화다양성 보호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한 정의를 보면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하며,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에 그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문화를 통한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의식이 내포되지 않고 지고한 가치로만 기술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관련 법·제도를 다시

4) 예술 프로그램 다양성(Artistic programme), 다양한 예술가 및 단체의 역량 개발 및 강화 지원(Talent development), 다양한 범주의 예술가 참여(Addressing barriers to artistic involvement), 다양한 작품의 보급 위한 자원 관리와 자체 점검(Resourcing and monitoring), 평가와 지식 공유, 변화 증진(Self-evaluation), 평등과 다양성 증진을 위한 리더십(Sector leadership) 등

바라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문화기본법이나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을 기본적으로 문화 그 자체가 배제 논리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모든 쟁점을 정리하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넓게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포괄적 법안이 필요할 것이고, 관련한 다양한 평등 관련법도 논의의 대상이 되리라 본다.

이처럼 문화정책에서 ‘포용’ 개념을 적용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제의 현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밝히는 일에서 시작해야 하며, 동시에 ‘문화’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전면적 통찰이 요구되는 것임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비인간적인 차별은 ‘문화적으로’ 자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감 능력 부족에 따른 이슈 등은 이미 문화적 차원의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포용은 단순히 기존 질서와 가치체계를 고수한 채 관용이나 미덕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차이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자기중심적 판단구조를 벗어나는 일이며, 그래서 가치체계와 사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론적 전환에 따라 문화정책에서의 모든 국면들, 즉 향유 및 창작지원정책, 문화다양성 및 법제도적 측면에서 전면적인 재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포용은 우리 사회에서 더욱 정교해진 차별에 대한 실천적이고 정치적 대응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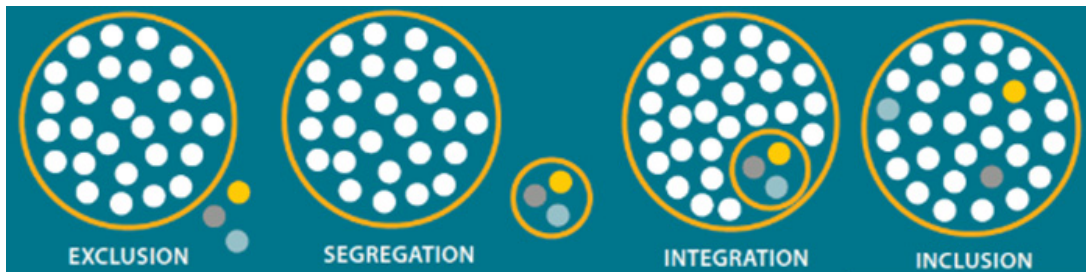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공통 질문]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문화정책”



아래의 그림은 포용적(포괄적) 교육과 관련하여 사용된 정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을 문화정책적 관점으로 본다면, 현재 한국사회는 어디에—① 배제, ② 분리, ③ 통합, ④ 포용—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사회가 배제, 분리, 통합, 포용의 어느 유형에 있다면, 향후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데 사회적 또는 정책적 장애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UN(2016),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eneral Comment No. 4

### A 포용사회의 이해

- 포용사회로서 한국의 현주소를 ‘배제-분리-통합-포용’이라는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자칫 진화론적 문제에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예를 들어, 현 단계를 통합단계라고 인식했을 때 여전히 분리, 배제되고 있는 집단은 관심 밖으로 내몰릴 수 있음. 이러한 이유에서 포용의 4‘단계’가 아니라 네 가지 ‘유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집단별로 다른 유형에 처해 있거나 2~3개의 유형이 중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봐야 함
- 예를 들어, 현재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결혼이주여성)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분리보다는 통합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종교(이슬람 및 무슬림)와 성소수자, 난민 등과 관련해서는 배제와 분리 현상이 뚜렷함. 심지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국적에 따라, 또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정체성 발현 정도에 따라 포용의 유형이 달라짐

- 이질적 문화에 대한 반응은 용인(Acceptance, 예, 외래문화의 유행), 거부(Rejection, 저항(Resistance)과 정화(Purification)를 둘 다 취하는 형태), 분리(Segregation), 적응(Adaptation) 등으로 설명되기도 하는데(Burke, 2009), 한국의 주류사회가 힘과 권력이 없는 비주류를 배제, 분리, 통합,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권력이 한국의 주류사회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외부적 요인(예, 서구적 사고와 문물, 서구의 대중문화)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또한 필요함
- 예를 들어, 한국사회가 대중문화를 받아들일 때 미국과 유럽 등의 서구문화 기반의 대중문화를 우선적으로 취하고, 또는 ‘선진’이라는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 부여함으로써 ‘선진’이 아닌 제3세계 문화를 배제, 분리하고 있음. 즉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집단(예, 성소수자, 장애인, 무슬림, 지방거주자) 뿐 아니라, 경계를 넘나드는 문화에 대해서도 포용적 관점이 요구됨. 특히 포용적 문화정책, 문화정책의 포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더욱 그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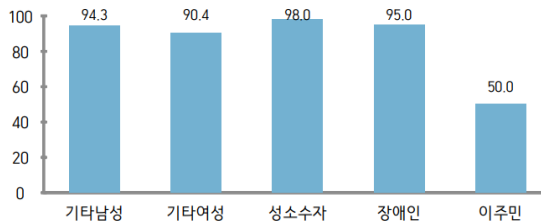
**혁신적 포용국가는 혁신과 포용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며,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여서 혁신적인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포용은 혁신능력을 높이고, 기술 혁신의 결과(배제)를 보완해주는 상보적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문화정책에서 포용과 혁신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한국사회의 현재 : 혐오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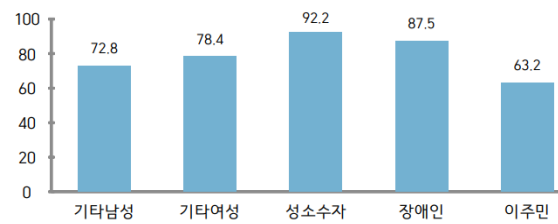
- 문화적인 측면에서 포용을 바라봤을 때, 한국사회의 현재는 혐오사회로 정의될 수 있을 정도로 전 사회적으로 배제와 분리가 만연되어 있음. 일부 학자들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한 것은 일상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것들이 균열을 보이는 것이라면서 현재의 혐오현상에 대해 긍정적 시선을 보내기도 하지만,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만 놓고 보면 한국사회는 포용사회보다 혐오사회로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함
- 사회적 공모(共謀)로 만들어지는 혐오는 “동질적이면서 본원적이고 순수한 공동체”(카롤린 엠케 2017)라는 표상을 추구하는데서 비롯되는데, 한국사회에서 여성·동성애자·외국인노동자·무슬림 등에 대한 혐오가 폭발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2017)의 「혐오표현 실태와 규제방안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소수자(기타남성, 기타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sup>5)</sup> 경험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한국사회도 혐오사회라 불릴 만큼 소수자를 향한 혐오표현과 혐오폭력이 만연되어 있음

5) 혐오표현이란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국가인권위원회, 2017)을 말함

[그림 1]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 경험



[그림 2]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 경험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7), 혐오표현 실태와 규제방안 실태조사 참조



문화비전2030(2018.05)과 혁신적 포용국가(2018.09)의 연계지점 및 상호역할 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문화비전과 혁신적 포용국가 : 포용의 기본원리로서 문화다양성

- 포용도시, 포용사회, 포용국가는 사회적 배제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본원리로 ‘포용성’을 내세우는데, 포용성은 ‘다름’을 통해 서로의 존재와 문화를 인식하고 공유하며 공존하는 즉, ‘문화다양성’에서 출발해야 함
- ‘문화다양성’은 특정 집단(문화)이 모든 것을 독식하거나 자신의 집단(문화)으로 다른 집단(문화)을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족(민족)·인종·종교·계급·성·신분·성 등 서로 다르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집단 간 차별과 배제 없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를 표현하는 것, 즉 ‘차이(다름)’를 인정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공유하고, 공존하는 것(가치관, 또는 삶의 방식)을 말함
- 종족(민족)·인종·종교·계급·성·신분·성 등과 관련하여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은 사회적 공모에 의한 구조적 폭력이며, 이러한 폭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포용의 첫출발로서 상대방을 인정하는 문화다양성의 원리가 필요함
- 특히 문화다양성은 사회통합과 더불어 새로운 문화창조를 통한 창의적 지역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바, 포용국가, 포용사회, 포용도시에서 강조하는 포용적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음
  - 다문화주의가 ‘타자에 대한 인정과 환대’를 의미한다면, 문화다양성은 문화 간 차이를 인정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원동력으로 바라봄으로써 창의적 지역발전을 견인함
- 즉, 문화비전과 혁신적 포용국가의 연계지점은 ‘문화다양성’에서 찾아야 하며, 포용국가의 철학적 가치로서 문화다양성이 적용되어야 함. 다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놓은 문화다양성 정책(문화비전2030 포함)은 예술향유의 다양성(비주류 예술 등의 향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예술 접근성 제고 등 문화다양성이 갖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문화다양성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문화적 활동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어야 함

## [세션 1] “혁신적 포용국가, 문화정책의 포용성 확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포용적’ 문화정책은 여러 가지 측면—① (기존, 새로운) 문화정책 내 포용(성)의 확대, ② 문화정책을 통한 사회의 포용성 확대, ③ 기타(①, ②와 다른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논의됩니다. 현 시점에서 이 같은 정책 가운데 어떤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점별(현재-중장기)로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 A 포용적 문화정책의 방향

- 포용은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고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공존의 가치가 실질적인 정책에 담겨져야 함. 혁신적 포용국가에서 ‘문화’의 영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 그럼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포용’ 관련하여 추진되는 정책은 ‘인식의 전환’이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처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문화·예술향유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본인은 문화정책을 통한 사회의 포용성 확대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문화 분야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며, 문화정책 내 포용(성)의 확대는 문화정책을 통한 사회의 포용성 확대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해함



포용적 문화정책, 문화정책의 포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사업 추진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정책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경제적 소외계층인지, 지리적 소외계층인지, 아니면 문화적 소외계층인지를 중심으로 말씀해주십시오]

### A 포용정책의 대상과 사례

- 포용국가의 기본원리로서 문화다양성을 강조한다면, 포용적 문화정책과 문화정책의 포용성 확대의 정책대상은 소수자의 문화적 표현(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한 ‘국민 모두’라고 생각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예시로 제시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리적 소외계층, 문화적 소외계층에서 주요 정책 대상은 문화적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적 소외’는 기존 정책에서 말하는 문화향유 수준과 접근성의 측면이 아님. 자신이 속한 집단(공동체, 계층)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일상에서 향유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는 소외계층을 말함
- 예를 들어 자신의 종교적 표현을 일상에서 하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는 무슬림, 새로운

예술 장르를 표현하고 싶으나 발표할 무대나 기회가 없는 예술집단 등을 말함. 즉 특정한 계층 일반이 아니라 특정한 계층 내에서도 문화적 표현에 소외된 여부에 따라 문화 분야의 포용 관련 정책 대상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함

- 자칫 말장난처럼 들릴지 모르겠으나, 하나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겠음
-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한 정신장애시설 장애인과 간호사가 꾸린 문화공동체 ‘아이리스’는 완주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공모한 문화공동체지원 사업으로 뿌리내린 단체임. 정신장애를 가진 회원들에게 사진과 그림을 가르치고, 이들이 핸드폰으로 주민(이발사 아저씨, 동네 슈퍼마켓 아줌마, 경찰 아저씨, 사진과 그림을 가르쳐준 작가와 간호사 선생님)의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전시회를 열었음. 사진이라는 미학적 활동을 통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깊은 환경에서 마을과 주민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함으로써 장애인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주고, 주민에게는 정신장애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반감시키려고 노력한 것임

全北日報

특 오목대

‘아이리스’ 회원들의 말 걸기

2019년 4월 26일 금요일 015면 오피니언

지난주 딱 이틀 동안 열린 특별한 전시회를 다녀왔다. 완주군 상관면 한 정신장애시설의 장애인과 시설 담당자들이 꾸린 문화공동체 <아이리스> 회원들이 찍고 그린 사진과 그림 전시회다.

상관면 주민센터 2층 전시실 입구에 들어서면 맨 처음 만난 글 한편. ‘나는 정신장애를 벗어나 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이름을 부르기 보다는 정신병을 가진 김 아무개로 말한다. 나는 단지……. 병을 벗어나 내 이름으로 불리우고 싶을 뿐이다.’

아이리스 회원들은 김 아무개씨 처럼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다. 우울증이나 조울증, 알코올과 약물 중독, 조현병 같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으니 사회와의 소통은 물론이고 누군가와 어떤 일을 도모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다. 문화공동체를 꾸린 이들의 전시회가 궁금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20여명 아이리스 회원들이 내놓은 사진과 글과 그림은 놀라웠다. 지난 1월부터 공



동체를 꾸리고 함께 해온 작업은 사진 찍기. 상관면 주민들이 대상이다. 머리를 잘라주는 이발사 아저씨, 동네 슈퍼마켓 아줌마, 경찰아저씨, 사진과 그림을 가르쳐준 작가와 장애시설 선생님, 자원봉사자, 그리고 동네 곳곳의 풍경이 이들의 핸드폰 카메라에 담겼다. 이들에게 함께 사진 찍기는 어떤 의미였을까. 좁지 않은 전시실을 가득채운 사진과 글과 그림이 답해주었다.

‘선생님은 참 친절하신 것 같아요. 하나로 마트에 갈 때마다 선생님이 근무 때는 기본

이 좋아요. 오래 오래 하나로 마트에 근무하세요. 항상 저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로부터 분리된 환경에 놓여있는 이들에게 사진 찍기는 자신의 일상에 스며든 누군가를 향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사회와 소통하고자 하는 바람의 통로였던 것이다.

‘아이리스’는 완주문화도시추진단이 공모한 문화공동체지원사업으로 뿌리 내린 단체다. 이 단체를 꾸리고 이끌어온 시설 담당자는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깊은 환경에서 마을과 주민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했다”며 “활동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마을 주민들의 따뜻한 배려가 장애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었다”고 전했다.

전시장을 돌아 나오며 마주한 또 하나의 글이 있다.

‘저는 이길순입니다. 마음이 착하고 약이 없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을까. 정신장애인들을 향한 사회적 편견과 우렁가 깊어지고 있는 지금, 아이리스 회원들의 말 걸기가 주는 울림이 크다.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 김은정 선임기자

#### [전북일보(2019.04.26.)의 ‘아이리스’ 관련 보도]

- 기존 정책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은 문화적 소외계층으로 이야기되고 그래서 이들에게 사진예술을 향유(전시회 관람, 직접 촬영)하도록 하는 사업은 포용적 문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이 사례는 단순히 정신장애인의 사진예술 향유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진예술을 활용하여 정신장애인의 시선에서 사회(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 거리 풍경 등)를 바라보고 비장애인과의 공유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이 배제나 분리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음
- 즉 이 사례는 문화정책 내 포용(성) 확대(사진예술을 활용하여 정신장애인의 문화적 활동 제공)를 통하여 문화정책을 통한 사회의 포용성 확대를 실현한 사업임
- 기존 문화 정책에서는 정신장애인에게 사진을 가르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이 사업이 기존 사업과 다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은 사업을 진행한 기획자가 정신병원에 근무하면서 정신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간호사이었기 때문임



**포용적 문화정책, 문화정책의 포용성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생태계 구성원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예술인, 예술단체 및 기관, 일반 시민의 역할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A** 위에서 언급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포용적 문화정책, 문화정책을 통한 포용성 확대는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기획자(매개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획자가 이러한 사업을 구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에서 포용적 측면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발굴되고 지원되어야 함을 말해줌



**포용국가를 위한 문화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보아야 할 (국내외) 문화정책사업 사례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정책환경과 정책사업의 검토

- 문화정책의 핵심키워드 중 하나가 ‘격차 해소’임.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의 문화향유 격차, 세대 간 문화향유 격차, 경제적 차이에 따른 문화향유 격차, 성별 간 문화향유 격차 등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소외에 따른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문화정책의 핵심 개념임(문화기본법의 핵심내용)
- 이러한 이유에서 포용적 문화정책에서도 소외계층외 비소외계층 간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하는데 집중하고 있음. 그러다보니 새로운 정책아젠다가 도출되면 이러한 핵심개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새로운 대상을 찾고 있음 (지금까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소외계층을 끊임없이 발굴하여 ‘그들의 희망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예술향유사업을 공급해줌)
- 심지어 이러한 핵심개념에 따라 문화다양성 정책 또한 다양한 계층에게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는데 집중되어 있음. 예를 들어, 성소수자는 자신들의 문화(정체성)를 표현하고자 하는데, 문화정책은 이들에게 예술향유기회를 제공하면서 문화다양성이 증진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임
- 포용적 문화정책에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필요함. 하지만 이것은 정책성과평가에서 말하는 이른바 산출성과(output)에 불과함. 포용적 문화정책에서 필요하고 목표로 세워야 하는 성과는 효과성과(outcome)와 영향성과(impact)이어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포용적 문화정책에서 검토되어야 할 정책은 문화다양성 정책이라고 생각함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문화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정책환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사회환경보다 정책기획 및 집행을 둘러싼 환경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A 정책환경과 정책사업의 검토

- 문화정책의 핵심키워드 중 하나가 ‘격차 해소’임.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의 문화향유 격차, 세대 간 문화향유 격차, 경제적 차이에 따른 문화향유 격차, 성별 간 문화향유 격차 등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소외에 따른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문화정책의 핵심 개념임(문화기본법의 핵심내용)
- 이러한 이유에서 포용적 문화정책에서도 소외계층외 비소외계층 간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하는데 집중하고 있음. 그러다보니 새로운 정책아젠다가 도출되면 이러한 핵심개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새로운 대상을 찾고 있음 (지금까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소외계층을 끊임없이 발굴하여 ‘그들의 희망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예술향유사업을 공급해줌)
- 심지어 이러한 핵심개념에 따라 문화다양성 정책 또한 다양한 계층에게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는데 집중되어 있음. 예를 들어, 성소수자는 자신들의 문화(정체성)를 표현하고자 하는데, 문화정책은 이들에게 예술향유기회를 제공하면서 문화다양성이 증진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임
- 포용적 문화정책에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필요함. 하지만 이것은 정책성과평가에서 말하는 이른바 산출성과(output)에 불과함. 포용적 문화정책에서 필요하고 목표로 세워야 하는 성과는 효과성과(outcome)와 영향성과(impact)이어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포용적 문화정책에서 검토되어야 할 정책은 문화다양성 정책이라고 생각함



지역단위의 문화정책 추진과정에서 <포용적 문화정책, 문화정책의 포용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포용성의 관점, 현재 지역 단위에서 추진되는 문화정책 사업 가운데 주목해야 할 사업 또는 개선되어야 할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A 핵심정책으로서 문화다양성 정책 : 정부와 지역

- 우리나라는 2005년에 유네스코 협약의 비준국이 되었으며, 협약을 이행하는 일환으로 2014년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법률에 따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아직 법적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문화다양성 관련 기본계획도 공식화되어 있지 않음
- 현재 추진되거나 새롭게 구상되는 사업 대부분이 법률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에 국한되면서 기존의 문화복지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아 사회를 바라보는 기본원리로서 문화다양성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 지자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음. 광역시·도 대부분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보조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거나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단순 지원 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 전라북도에서는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이 문화체육관광국, 대외협력국에서 문화복지정책과 다문화정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국제교류센터에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사업과 국제교류 사업을 진행함

[표 4]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관련 기관

문화다양성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지개다리사업</li> <li>•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사업 (학교/사회/소외계층)</li> <li>• 문화나눔 사업</li> <li>•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 사업</li> <li>• 다양성 영화지원 및 인디음악 지원 사업</li> <li>• 국제 문화원조 사업(쌍방향 문화교류,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li> </ul>
관련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li> </ul>

[표 5] 전라북도의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부서		주요사업
문화체육 관광국	문화 유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교문화 기반시설 확충</li> <li>• 산사에서의 깨달음과 행복여행, 템플스테이 운영 : 8개 사찰</li> <li>• 상생의 보편가치 전파 종교문화 지원: 세계종교문화축제(10월중)</li> </ul>
	문화 예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도민문화예술 교육기회 확대</li> <li>• 소외계층 문화향유기회: 문화이용권, 도립국악원 찾아가는 예술단</li> <li>•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도 단위 동호회 페스티벌 개최</li> </ul>
대외 협력국	국제 협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마을학당 운영 등 맞춤형 한국어교육 강화</li> <li>•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li> <li>•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 조성: 다문화어울림 문화교육 등</li> </ul>
	국제 교류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국제교류페스티벌 개최</li> <li>• 국제교류 유관기관과 교류협력사업 확대</li> <li>• 도민 국제화 마인드 제고 사업 추진: 국제정세(정치·경제·문화)의 이해 증진을 위한 도민 국제교류 이해강좌, 청소년 글로벌 리더 양성 사업 추진, 도내 거주 외국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전북 등)</li> <li>• 민간국제교류 활성화: 민간주도 풀뿌리 교류 활성화를 위한 세계 마을간 교류사업 연계지원, 우수 민간국제교류사업 발굴 및 지원</li> <li>• 도내 외국인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외국인 생활기반 지원</li> </ul>

자료: 전라북도(2016), 실국별 2017년 업무보고 참조

- 문화다양성은 외국인주민, 또는 특정종교나 성소수자 등 특정대상을 위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가치와 철학'으로 인식되어야 함
- 정부나 지자체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사회를 보는 기본원리이자 포용국가를 위한 가치로서 이해되지 못하고,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단순 지원정책 또는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만 이해되고 있음

- 무슬림에 대한 혐오표현, 난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등이 심해지고 있으나 문화다양성정책의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현실부터 각성하고, 포용사회의 원리로서 문화다양성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또한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는 1차적 목표(산출, output)을 뛰어넘어, 문화를 통하여 소외계층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집단적 문화를 표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소외계층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데 목표를 둔 지원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참고자료] 완주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공동체 지원 사업 중 ‘아이리스’ 사업 개요

제 목	공감, 빛을 담다
기 간	2019년 1월 ~ 4월
장 소	상관면 한사랑 정신재활시설
추진공동체	아이리스(아리아리)
내용	<div>○ 주요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카메라 이론교육 및 실습, 상관면 내 출사활동, 주민사업설명회</li><li>- 전시회 및 영상제</li></ul></div> <div>○ 결과<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정신장애인들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핸드폰을 활용한 사진 찍기 활동을 진행</li><li>- 사진촬영의 이론교육이 아닌 사진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이 교육의 중심이 되었으며, 참여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강사로 인해 안정적인 교육이 진행됨</li><li>- 지역과 지역주민을 기록으로 담기 위해 주민사업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사진을 매개로 지역과 주민들의 만남</li><li>- ‘너와 나, 우리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회원들과 만남을 가졌던 주민들의 사진전을 진행</li></ul></div> <div></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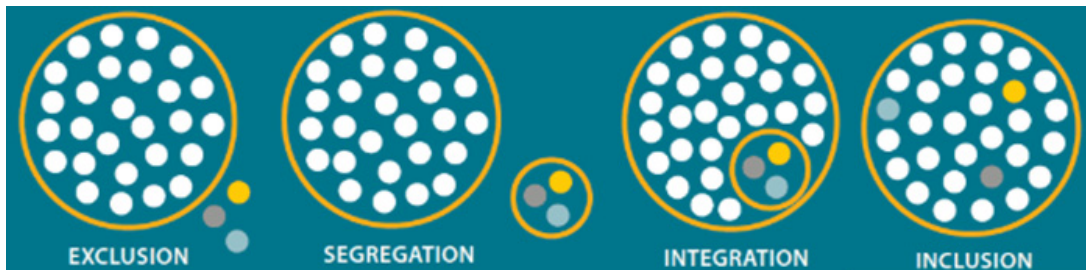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공통 질문]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문화정책”



아래의 그림은 포용적(포괄적) 교육과 관련하여 사용된 정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을 문화정책적 관점으로 본다면, 현재 한국사회는 어디에—① 배제, ② 분리, ③ 통합, ④ 포용—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사회가 배제, 분리, 통합, 포용의 어느 유형에 있다면, 향후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데 사회적 또는 정책적 장애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UN(2016),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eneral Comment No. 4

**A** 현재 한국 사회는 유럽 복지국가와 달리, 그 동안 지속되어 온 경제정책 우선주의 및 최소주의 사회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이 배제와 분리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배제와 분리에서 통합과 포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균형과 상호 보완적 역할 설정, 사회정책 내 영역 간 융합 및 연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핵심적인 원리가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 설정과 각 사회정책 영역별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혁신 기반과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세부 정책의 실현을 통해 국민의 정책 체감 및 경험 축적, 사회적 신뢰 수준 회복, 우리의 다양한 삶에 있어서 사회정책의 중요성과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 등이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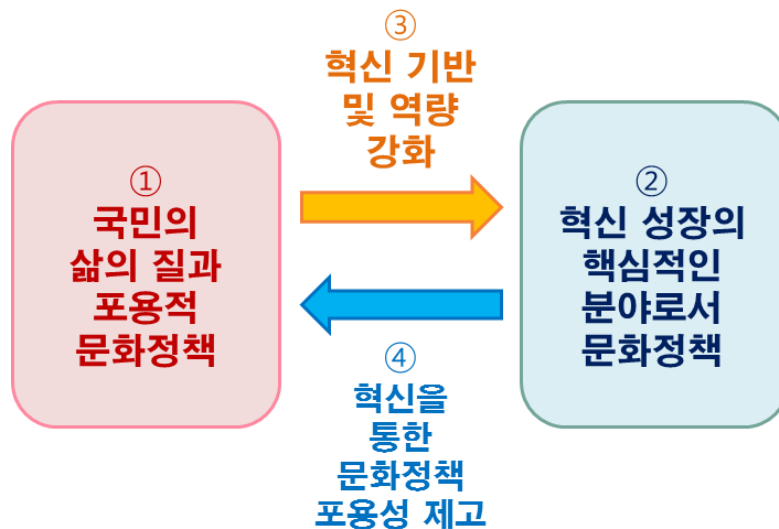


혁신적 포용국가는 혁신과 포용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며,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여서 혁신적인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포용은 혁신능력을 높이고, 기술 혁신의 결과(배제)를 보완해주는 상보적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문화정책에서 포용과 혁신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지난 5월 포럼 토론에서 제가 제시한 것처럼 포용과 혁신은 상호 보완적 관계이며, 포용과 혁신은 그 자체로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추진의 핵심 가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포용성 강화를 통한 혁신 기반 및 역량 제고, 그리고 다양한 인적자본과 기술뿐 아니라 정부와 지역사회, 구체적인 정책 또는 제도, 일상생활의 삶의 방식 등 사회 전반의 혁신을 통해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문화정책 영역 역시 이러한 상호 보완적 관계, 긍정적 순환 관계에 따른 방향 설정 및 4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다양한 세부적인 정책 사례의 실천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경험을 토대로 일상 속에서 실증적 기반을 확대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혁신적 포용국가 문화정책 역할 강화 방향 (최현수, 2019.5)〉



문화비전2030(2018.05)과 혁신적 포용국가(2018.09)의 연계지점 및 상호역할 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문화비전 2030의 3대 방향에 제시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등 핵심적인 가치와 9대 의제 및 내용 구성은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에서 강조된 문화정책의 역할 및 주요 정책 방향과 연계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추진에 있어서 문화정책 내부 지향적으로 분리 또는 단절된 상태에서 추진되는 방식이 아니라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에 제시된 돌봄, 교육, 건강, 일자리, 지역 균형 등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과 연계 및 융합을 견지하며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기존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세션 1] “혁신적 포용국가, 문화정책의 포용성 확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포용적’ 문화정책은 여러 가지 측면—① (기존, 새로운) 문화정책 내 포용(성)의 확대, ② 문화정책을 통한 사회의 포용성 확대, ③ 기타(①, ②와 다른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논의됩니다. 현 시점에서 이 같은 정책 가운데 어떤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점별(현재-중장기)로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A** ② 문화정책을 통한 사회의 포용성 확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①에 해당하는 문화정책 내 포용성 확대 역시 일차적으로 중요하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체적인 정책 추진과정에서 문화정책 내부로의 지향성으로 분리 또는 단절된 상태에서 추진되는 방식이 아니라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에 제시된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과 연계 및 융합을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이에 ② ‘문화정책을 통한 사회 전반의 포용성 확대’, 그리고 포용성 강화를 위해 다른 사회정책 영역과 연계한 통합적 접근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한 포용성 확대는 포용과 혁신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혁신 기반 및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정책 분야 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정책 또는 서비스 제공 주체 및 현장의 혁신을 통해서 포용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 과제(③) 역시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용적 문화정책, 문화정책의 포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사업 추진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정책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경제적 소외계층인지, 지리적 소외계층인지, 아니면 문화적 소외계층인지를 중심으로 말씀해주십시오]

**A** 예를 들어 제시해주신 세 가지 소외계층의 개념 및 정책대상 설정 역시 분리되거나 단절된 것은 아니며,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진할 경우 기존과 같은 문제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향유나 교육 등 문화 영역과 관련된 일상생활을 우선적으로 포기하고 살아가는 경제적 소외 계층의 문제가 중요하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정도의 국민들 역시 문화서비스 향유나 참여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체감하면서 시장 또는 사적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정책과 서비스 전반의 공공성 확대 측면에서 문화정책 역시 보편적인 대상 및 지역에 대한 통합적, 균형적 접근을 통해 문화정책 영역에서 발생하는 소외 또는 배제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용적 문화정책, 문화정책의 포용성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생태계 구성원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예술인, 예술단체 및 기관, 일반 시민의 역할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A**

**【중앙정부】**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문화정책 공공성 강화 등 포용적인 문화정책 수립 및 정책 추진과정 혁신, 사회정책 각 분야와의 융합 및 통합적 접근, 문화정책 포용성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

**【지자체】** 문화정책 공공성 강화 및 지역사회 문화서비스의 통합 연계 제공 주체로서 역할 및 역량 강화

**【시민사회】** 참여와 연대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지역사회 내의 통합적 정책 및 서비스 요구, 특히 문화정책 및 서비스, 인프라의 가치 및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확대를 위한 선도적 역할

**【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창조자이자 문화서비스 콘텐츠 제작자로서 공공성 및 책임성, 일반 시민과의 접근성 제고

**【예술단체 및 기관】** 문화정책 발전을 위한 문화서비스 콘텐츠 제작자 및 제공자로서 공공성 및 책임성, 투명성 강화, 경제적 가치 우선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사회적 가치의 확대 및 균형적 발전 노력

**【일반 시민의 역할】** 문화향유 및 문화예술 관련 교육 참여 등이 경제적 가치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인식 및 생활방식 전환, 시장 및 사적 영역에서의 개별적 접근에 따른 가계 부담에 대한 문제 인식 및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문화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 수요 제기



**포용국가를 위한 문화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보아야 할 (국내외) 문화 정책사업 사례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 기존 정책 중에 통합 문화바우처의 보편성 및 보장수준 제고를 위한 확대 개편 및 최근 추진 중인 문화서비스 인프라 중심의 생활 SOC 확충 사업 추진방식 개선 필요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일자리 확충과 연계하여 문화서비스 관련 문화컨텐츠 제작 및 서비스 제공, 문화예술교육 연계 및 공공성 강화, 생활 속의 문화서비스 이용 제고 등 문화서비스 공공성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통합적 정책 추진 중요
- 문화서비스 이용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에서 발생 가능한 역진성 문제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 및 대안으로서 환급형 문화세액공제 또는 국세 포인트 적립 및 활용방안 설계를 통한 형평성 개선 및 문화서비스 이용 확대(공공-민간의 다양한 문화컨텐츠 제공기관 및 문화 인프라 연계 운용방안 설계 가능)
- 문화정책 분야 혁신을 통한 포용성 제고 방안 병행 추진
  - ☞ 문화컨텐츠 산업 및 문화예술교육 분야 분배구조 개선 및 일터 혁신, 사회안전망 운영 패러다임 혁신을 통한 포용성 제고
  - ☞ 돌봄서비스 제공 노동자의 삶의 질이 중요한 것처럼 문화컨텐츠 제작 인프라와 문화예술계 종사자 삶의 질 제고 역시 중요하며, 문화 산업 분배구조 혁신과 문화예술 종사자에 대한 일자리 공공성 확대 및 선순환 구조를 통한 포용성 제고 필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문화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정책환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사회환경보다 정책기획 및 집행을 둘러싼 환경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A**

문화정책의 포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기획, 설계 및 집행 과정 등 세부적인 정책 추진에 있어서 문화정책 영역 내부 지향적으로 분리 또는 복지, 교육, 일자리 등 여타 사회정책 영역들과 단절된 상태에서 추진되는 방식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문화정책 역시 매우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영역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항상 가까이 존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 전략에 제시된 돌봄, 교육, 건강, 일자리, 지역 균형 등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과의 연계 및 융합을 통해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정책 분야 다양한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문화비전에 제시된 방향과 의제들을 실천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정책은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참여, 연대, 통합, 포용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무엇보다도 구성원들 사이의 공감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 사회정책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서 그 역할과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는 그 동안의 정책추진의 한계로 인해 문화정책이 지닌 이러한 가치와 중요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던 문화향유 지원 및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문화서비스의 보편성 및 보장수준 확대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여타 사회서비스 분야 사례들과 연계하여 문화서비스의 다양성과 접근성, 수요자의 선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정책이 포용과 혁신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 및 연구결과의 구축은 충분한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문화정책의 중요성과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문화가 사회서비스의 하나로 포함되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으로서의 포용국가(전략)과 문화정책의 관계, 그리고 사회서비스와 문화서비스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향후 문화정책과 사회정책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사회보장의 개념 및 범위(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특히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정책 영역에 따라서, 복지국가의 사회정책 영역은 복지정책 영역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 영역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정책 영역에는 우선적으로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저소득층 지원 중심의 공공부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그리고 최근 도입된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 수당 등 다양한 소득보장제도가 포함됩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더불어 사회정책의 영역으로서 최근에 강조되는 중요한 개념은 “사회서비스”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및 재활, 돌봄, 정보 제공, 관련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협의의 복지 개념에서 벗어나 유럽 복지국가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경제정책과 균형을 강조하며 중요시 되는 사회정책의 영역을 새롭게 설정하고, 사회정책의 다양한 영역 간 상호 유기적 연계 및 통합을 통해 기존 소득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도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을 위한 보편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요컨대, 사회정책과 문화정책의 상호 관계 역시 이러한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위, 특히 사회서비스의 개념 정의에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문화 영역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영역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정책 영역 및 관계 설정, 정책 집행과 관련된 사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 규정을 기초로 운영 중인 대표적 사례로 ‘중앙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신설/변경 사회보

장제도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 타당성, 기존 제도와와의 관계,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며, 협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 및 조정 대상 정책영역 및 사회보장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보장’ 및 ‘평생 사회안전망’ 개념에 의한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 복지사업으로, 현재 이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가 관리 및 조정하고 있는 중앙정부 사회보장 사업은 약 400여개에 이르며 문화정책 영역의 경우 통합 문화바우처,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와 연계된 각종 정책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사회서비스 중장기 기본계획의 10대 분류에서 문화 영역이, 최근 강조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8개 분야에서도 문화여가 영역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회보장 기본계획 등에서는 문화정책 영역이 사회정책 내의 개별 정책영역으로 분리된 상태로 접근하여 해당 분야의 복지 및 서비스 관련 사회보장 사업 단위로 논의된 반면에, 이번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비전과 전략에서 문화정책이 중요하게 강조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저를 포함한 정책기획위원회 포용국가 비전 전략 작업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해당 정책의 중요성을 넘어 다양한 문화정책, 문화예술교육, 문화컨텐츠 등이 우리 사회정책의 포용성을 제고하고 혁신 기반과 역량을 마련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다양한 정책 추진 및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문화정책 역시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과 공공성의 강화가 중요합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된 최저임금이나 소득보장만이 아니라, 유럽 복지국가와 달리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부족으로 인하여 개인이나 가구가 이를 위해 시장에서 사적으로 부담하는 주거, 교육, 의료, 통신, 문화, 환경 등 가계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소비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 확대를 통하여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영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정책의 포용성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화 영역은 소득이 감소 또는 시장에서의 가계 부담이 증가하거나 적정 가격의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면 저소득층 또는 문화 취약계층부터 포기하게 되므로 계층, 지역, 세대 간 격차 심화 문제가 나타나고 국민의 사회정책에 대한 체감 정도는 낮아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문화예술체육 등의 교과 이외에 사교육비의 경우 교육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교육부만의 영역에 아니라 사회정책 영역에서 문화부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일자리를 통해 해결해가야 하는 정책 과제로 보건복지부와도 협력해야 하는 영역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커뮤니티 케어, 정신건강 서비스 등의 확대 과정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로움 대응과 사회적 관계 강화 전략의 사례도 이와 유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공통질문 + 제2섹션

혁신적 포용국가, 문화정책의 혁신성 확대

**이병민...31**

건국대학교 교수

**전성환...39**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정종은...45**

상지대학교 교수

**한종호...55**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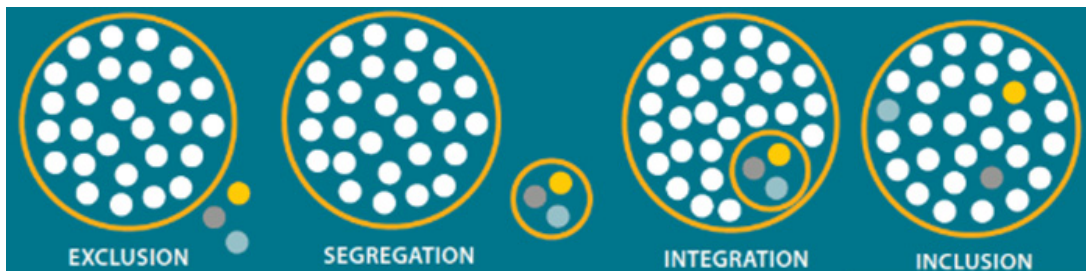


**이병민**  
건국대학교 교수

## [공통 질문]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문화정책”



아래의 그림은 포용적(포괄적) 교육과 관련하여 사용된 정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을 문화정책적 관점으로 본다면, 현재 한국사회는 어디에—① 배제, ② 분리, ③ 통합, ④ 포용—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사회가 배제, 분리, 통합, 포용의 어느 유형에 있다면, 향후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데 사회적 또는 정책적 장애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UN(2016),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eneral Comment No. 4

**A**

- 우리는 사회적 ‘배제’의 특징을 나타내며, ‘분리’의 특성이 강한 면면을 많이 드러내고 있음
- 이와 관련 지금까지 언급되어온 포용성은 배제와 관련하여 주로 사회적 포용성에 국한하여 이야기가 많이 되어옴. 사회적 포용성은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와 관계에 접근하고, 통합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이 아직까지는 여의치 않음
- 최근 세계는 세대, 국적, 젠더, 취향, 언어, 지역 등의 요소가 점차 다양화되는 가운데,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서 이문화간의 소통과 공감의 차원과 밀접하게 관련성을 맺으며,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어, 사회적 포용성의 대안으로 문화적 포용성을 고민할 필요성이 큼. 사회적 포용성에서 강조하는 통합이 배제를 지양하고 각각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면, 문화적 포용성은 공존을 더하여 문화적 의미를 찾는다고 하는데서 의미를 확장할 수 있음. 이때는, 배제를 염두에 둔 영역 내부의 관계가 중요한 반면, 문화적 포용성은 내부성의 관계에서 나아가 보다 유동적, 개방적,

- 수평적인 관계성으로 이행하고 있어, 배제-분리-통합-포용과 함께 공존의 의미를 더할 수 있음
- 문화적 포용성은 생산과 소비를 잇는 매개뿐만 아니라 문화적 기억, 사람, 내외부적 환경 등의 여러 영역과 관련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하는 특성을 드러냄. 특히,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사이버 공간의 확장과 함께 소셜플랫폼 등을 통해 문화적 혁신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음. 양적인 신뢰보다는 질적인 신뢰가 집단지성을 통해 협업관계를 만들고, 쌍방향 교류를 전제로 영역성과 관계성의 시너지를 도모하며, 사회·경제적 활동의 매개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때문
  - 예를 들어, K-Pop의 세계적인 동호화들이 사이버공간 상에서 결성되고, 취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 그러한 예라 할 수 있음. 이는 마페줄리의 표현에 따르면, 취향과 삶의 향유 패턴이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문화적 종족주의가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문화다양성의 기치 아래 현대사회는 다양한 계층과 집단이 목적성에 따라 형성되고 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문화적 포용성을 염두에 둔 혁신적 문화정책의 실행은 문화적인 다양성을 기반으로 영역과 관계가 혼종성을 나타낼 수 있음. 이를 통해 혁신의 성과가 확장되며, 새로운 정책의 기반이 되며, 또 새로운 문화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음



**혁신적 포용국가는 혁신과 포용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며,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여서 혁신적인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포용은 혁신능력을 높이고, 기술 혁신의 결과(배제)를 보완해주는 상보적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문화정책에서 포용과 혁신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 최근 문화(및 문화산업)는 경제 공간을 조직하는 매개자(mediator)로서의 역할(Coe et al., 2007; Park, 2015)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즉 문화적 회복력(cultural resilience)으로 영향력이 증대되어옴
- 문화적 회복력은 다양하고 도전적인 환경을 탐색하고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전통과 문화 배경을 토대로, 삶의 경험을 활용하여 취득해낸 역량 또는 내부적인 강점으로 정의할 수 있음(Strand and Peacock, 2003). 혁신과 포용의 관계는 경제와 산업, 문화의 관계처럼 일견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문화의 도구적 측면에서 나아가 전체 국가발전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력을 한층 강화시키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음.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문화와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이 더욱 주목받고 있음. 관련하여 최근 문화와 예술의 사회적 참여 등으로 수익구조와 대중화 등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고는 있어, 눈여겨볼 만함<sup>6)</sup>

6) 문화와 예술의 직접적인 사회적 영향력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여가활동을 제공하며, 인간의 사고를 '고양'시키며, 그들의 심리적, 사회적 웰빙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감수성을 발달시키는 것임. 최근에는 간접적인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SOC등 공공적 편의시설에 대한 쾌적함의 요구를 자극하거나 만족하게 하여 사회적 환경을 풍요롭게 하거나, 사회적인 '문명화'의 효과와 사회적인 조직(예: 아마추어 예술) 등의 지원을

- 이와 같이 문화는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촉매제로 새롭게 인식되며, 콘텐츠산업에서와 같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포용성과 혁신성의 조화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



**문화비전2030(2018.05)과 혁신적 포용국가(2018.09)의 연계지점 및 상호역할 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소위 문화혁신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함. 따라서, 문화비전 2030정책에 의미하는 바를 신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피드백과 함께 혁신이 반복되며, 문화가 축적되는 ‘지속가능성’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됨. 문화비전 2030에서도 방향성을 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때로는 도구적 성격으로 이용되어지는 경우도 많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음. 문화적으로는 정책적으로도 담론이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담론의 형성과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문제는 사회의 창의성을 확산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 보다 명확한 초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임. 혁신과 관련된 주체는 대부분 경제개발 주체를 떠올리지만, 개발 후 이루어지게 될 국민들과 경제/산업의 소비자들, 문화의 경우는 향유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통에 대해서도 연관지어야 하기 때문. 이는 호혜성의 원리(시민사회/공동체)와 나눔을 원칙으로 하는 재분배의 원리(국가)가 작동하는 영역에 대한 고민이 될 것임. 문화를 기반으로 혁신을 논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사회적경제와 같은 활동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임. 이를 위해 ‘혁신’과 ‘포용성’ 등 주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경제가 아닌 ‘문화’ 문제로서 바람직한 관련 생태계를 앞으로 만들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계속 대두되어야 할 것임

활성화하고, 다양한 실험을 통한 창의적인 자극을 가능하게 하고, 사고의 혁신을 가져오는 등 makers 영역과도 관련됨. 또한, 예술 활동과 문화적인 산물 등은 지역사회의 집합적인 기억을 돕고, 다음 세대를 위한 창의적이고, 지적인 사고를 위한 저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큼 (유럽문화발전테스크포스(The European Task Force on Culture and Development)(1997).

## [세션 2] “혁신적 포용국가, 문화정책의 혁신성 확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혁신적’ 문화정책은 두 가지 측면—① (기존, 새로운) 문화정책 내 혁신(성)의 확대, ② 문화정책을 통한 사회의 혁신능력 확대, ③ 기타(①, ②와 다른 측면)—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정책가운데 어떤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점별(현재-중장기)로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 어떤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임. 예를 들어 문화예술의 창의성을 산업 영역으로 확대 및 적용(산업의 문화화)하거나 문화예술분야의 산업을 육성(예술의 산업화)하기 위해서 양쪽에 모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처럼, 문화정책내의 혁신성의 확대와 문화정책을 통한 사회의 혁신능력은 연결되어 있어, 같이 가야하는 분야이기 때문임. 다만, 자생적인 혁신성의 증대와 연계·융합 등의 초점이 주어진다면, 국가발전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문화의 범주가 넓어지는 작금의 시대에는 후자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이는 기존의 사회적 영역에 문화적 예술성, 스토리텔링이나 즐거움, 동기유발, 재미 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산업 부문(비즈니스, 교육, 금융, 헬스케어 등)의 혁신성을 제고하며,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임.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적 가치의 투입을 통한 경로 업그레이드가 나타나는 경우, 시스템의 구조적인 변화와 차별화 요소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다양한 혁신 잠재력의 요소들이 커지면서, 전체적인 부가가치의 향상과 틈새의 발견 가능성이 커지게 됨
- 예를 들어 콘텐츠산업의 경우, 유·무선 인터넷 및 모바일 기술의 급격한 발전, 다매체·다채널·다기능·고기능의 멀티미디어 문화의 도래는 기존의 콘텐츠가 유비쿼터스 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로 확대되고, 새로운 스마트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함. 이에 따라 여러 플랫폼에 최적화된 콘텐츠의 감상, 독특한 취향의 이해, 소비자의 욕구와 이용 패턴을 포함하는 멀티채널 접근에 기반한 수익모델의 설정 등의 사업화 전략 구상에서 창의성과 문화적 역량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임



혁신적 문화정책, 문화정책의 혁신성 확보를 위한 정책사업 추진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정책영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혁신적 문화정책을 콘텐츠산업 혁신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A

- 이는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문화정책의 혁신성, 문화정책을 통한 사회의 혁신능력 확대와 관련이 있으며, 관련된 정책 지원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산업'정책이 아닌 '문화'정책으로서의 방향성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강조될 수 있기 때문
- 따라서 기술의 변화에 따라 문화적 가치가 산업의 혁신성을 높이는 촉매로 작용하면서 창의 인력의 확보와 산업영역으로의 연계가 중요함. 혁신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산학협력 및 재교육 관련 정책이 필요하지만, 특히 문화예술의 창의성을 결합하고 산업 영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융합적 학습과 경험이 이루어져야 하며, 콘텐츠의 부가가치는 창의력과 인문학적 사고에서 기초하기 때문에, 인문학적 감성과 문화원형, 아이디어 등 창작 행위를 촉진할 수 있는 문화 발전 지원정책이 필수적임



**혁신적 문화정책, 문화정책의 혁신성 확보를 위한 정책사업의 문화예술생태계 구성원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예술인, 예술단체 및 기관, 문화산업계, 일반 시민의 역할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A

- 지역사회를 예로 들자면, 지역내 행정, 경제, 교육, 사회 주체 간 생태계 차원의 전략적 협력구조를 형성하여 지역문화예술생태계와 관련된 사회의 선순환 발전구조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필요함
- 이때, 지역 예술인, 예술단체 및 기관 뿐 아니라, 콘텐츠기업, 프로슈머, 전문가(기획, 창작)-제작(중소기업)-유통(지역 외 대기업)-소비, 지원(공공) 등 다양한 가치사슬별 협력 체계 및 리쿠르팅(recruiting)을 통한 협력프로젝트가 가능하고, 지역 문화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콘텐츠 휴먼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또한, 부처간 연계도 필요한데, 지역사업을 예로 들자면, 지역 전통문화와 음악, 미술 등 문화예술 뿐 아니라, 콘텐츠를 수집·발굴·가공·향유하는 지역 문화공동체에 코디네이터와 관련 인력을 지원하는 정책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진흥법 토대 도시/마을재생 및 생활문화공동체사업 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중심지활성화 사업 등을 연계하여 지역의 인구, 환경개선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더해져 시너지를 창출해야 함.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지역산업진흥원, 지자체 문화재단, 문화원, 지역 테크노파크 등 문화·예술콘텐츠 관련 단체, 기업 등의 협력 및 연계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의 문화적 삶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될 수 있을 것임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문화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보아야 할 (국내 외) 문화정책사업 사례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 예를 들어 유럽의 스마트전문화전략 (Smart specialization strategy; S3)은 초국적 광역기반 혁신 정책이면서 장소맞춤형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정책 플랫폼으로 제시된 사례가 있음 (Gillitsch and Asheim, 2018)
- 스마트전문화전략은 산업구조를 지식기반형으로 변화하고, 특정 산업부문이 아니라 콘텐츠나 지식 투자를 통해 새로운 영역을 탐색(exploration) 및 활용(exploitation)하는데 주안점을 둠. 따라서 유사한 산업이 발달한 지역일지라도 지역산업의 발달경로는 상이할 수 있고, 산업기반이 미약한 주변부 지역에서도 지식기반의 결합을 통해 대안적인 발전 경로를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문화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문화기반 혁신전략을 예로 들자면, 지역 콘텐츠산업 자체의 발전 경로 또는 문화와 예술 지식이 지역 내 기존 산업과 결합하는 양상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 또한 지역 문화의 다양성으로 인해 기업가정신이나 외부지역과의 연계 전략은 지역마다 차별적이다. 이와 같이, 스마트전문화전략은 지역의 산업혁신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산업의 발달경로와 문화기반 지역적 맥락 (regional context)과 잠재력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략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기술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창조적 융합문화예술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핵심 기술과 문화예술의 접목이 논의됩니다. 이 같은 변화에서 문화정책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 4차산업혁명이 많이 회자되면서 새로운 경제활동의 사례로서, 사회적 경제의 의미가 도드라지면서, 문화 기반 혁신의 의미를 논하는 계기가 마련됨. 현재와 미래의 잇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러한 논의는 혁신의 거점으로서 문화를 언급하며, 상향식 발전을 추동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됨
- 4차산업혁명이 등장하고, '디지털'이라는 화두가 문화의 핵심적인 키워드로 등장한 작금의 현상에서는 새로운 포스트 모던사회의 사회적 특성을 '지속적으로' 규정 짓는다는 측면에서 이전 논의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발전의 측면에서 보자면, 모더니티와 일상성이 '공감'이라는 특성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앞으로의 미래사

회의 주요한 특질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화적인 시각을 요구하고 있음

- 다만,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타나면서, 문화혁신, 경제혁신, 산업혁신, 혁신정책 등 혼동을 불러일으킴.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는 ‘투자활력’, ‘경제활성화’, ‘소비·수출활화’ 등 양적인 성장에 집중되어 있음. 이에 개념과 담론, 정의 및 범위에 따라 스펙트럼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고 논의를 더해가야 함
- 보통 혁신은 결과물로서의 혁신뿐 아니라 과정(process)으로서의 혁신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문화 기반 혁신의 경우는 질적인 혁신을 강조하기 때문에, 후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임
- 문화를 기반으로 한 혁신을 이야기할 때는 소비뿐만 아니라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milieu)의 물질적, 비물질적 표현의 생산에 기반하며, 함께 공유하거나 함께 창조하는 즐거움이 중요하기 때문. Douglas (2016)는 다양한 공동체가 참여하는 장소성 기반 사회적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의적 환경(creative milieu)의 조성 및 함께 유쾌함/즐거움(conviviality)을 공유하는데 있다고 강조하고 있음. 이는 종래의 다른 경제활동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의 혁신을 창출하는 단초가 됨. 이를 통해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의 사고는 우리가 살고, 생산하고, 나누는 곳이 어디이며, 누구인지 의미를 부여하며, 문화를 토대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여겨짐



**현재의 문화정책(사업) 가운데 혁신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주목해야 할 사업 또는 개선되어야 할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화콘텐츠의 활용에 따라 제조업, 관광 등 타 산업과의 융합, 해외시장 진출, 문화콘텐츠 이용과 소비의 국제적 협력 추진 등의 이슈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정책적으로 기술과 주력산업의 융합을 위한 소위 콘텐츠 R&D 지원 확대 및 관련 체계와 법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다양한 차원에서 차별화된 전략의 수립이 요구됨
- 생활문화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콘텐츠와 기존 산업을 결합하려는 노력과 함께, 의·식·주(소비재), 자국 문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융합 등 전체적인 수요를 고려하는 정책도 동반되어야 할 것임. 특히 최근 문화정책에서 생활문화가 더욱 강조되면서, 문화의 경제적 효용성에 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미감, 상징성, 브랜드와 신뢰 등이 콘텐츠 창출 전략으로 중요하게 고려된다고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지역유희공간을 활용한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예술창작 공간 제공은 창의적 설계(디자인, 공간), 문화적 생활 등 정책 분야에 문화적 관점을 접목하고, 생산과 산업 뿐 아니라 국민의 삶, 수요, 소비의 측면까지 고려한 과제라고 볼 수 있음
- 이를 고려하여 미래 인재의 확보를 위한 교육,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사회의 향유 차원에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우선 미래 인력 양성 차원에서 창의력, 비판적 사고, 소통, 협업 능력 등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교육체계 수립 및 실행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함. 혁신성을 강조하는 콘텐츠산업의 경우를 고려한다면, 문화콘텐츠 관련 창업 및 기업 성장 요건 조성 강화, 문화콘텐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성장순환 사이클 구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지속가능한 지역의 문화정책 차원에서 지역사회 전반의 창의력을 높이는 평생교육 활성화 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임. 지역내 삶의 질을 염두에 둔 융합콘텐츠(문화예술+콘텐츠+미디어) 리터러시의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다양한 세대·계층별 체험콘텐츠 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사업에 주력하면 좋을 것임. 시장에서 이와 같은 개발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적인 T자형 인력양성을 위한 재교육 및 산학협력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며 지역 생활문화콘텐츠를 진흥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을 고려한다면, 생활문화 중심 문화콘텐츠 창작공간의 마련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문화콘텐츠창작공간이란 개인(창업자, 예술가, 기획자, 기술자 등)이나 단체(영리, 비영리,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의 아이디어 구현, 실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창작공간제공, 지원,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공간을 의미함. 기존의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아이디어 창작공간은 대부분 전문가대상 아이디어 창작공간으로 볼 수 있는데 전문가 대상 아이디어 창작공간은 주로 창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지원센터(벤처인큐베이터), 창작자와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가 레지던스, 창작지원센터 등의 형태로 추진되며 전문 창작자, 예비창업자, 소규모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아이디어 창작공간들임
- 반면의 생활문화중심 아이디어 창작공간은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취미, DIY 중심의 개인적 창작, 실험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다양한 목적과 수요를 지닌 개인들이 학습하고 실험하고 창의적 상호작용하는 활동들을 지원하는 공간을 의미
- 방문 동기 측면에서 전문가창작공간은 주로 영리목적이나 전문적 목적 달성을 위한 활용을 목표로 하는 반면, 생활문화중심 문화콘텐츠창작공간은 수익창출과 함께, 개인의 호기심과, 자기개발, 커뮤니티활동, 취미 등 다양한 목적을 지니고 있어, 공공의 정책적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정책의 추진이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문화적 포용성을 염두에 둔 형태로서 사회의 창의성을 확산하며, 공동체의 다양한 연계를 통해 삶을 바꾸어나가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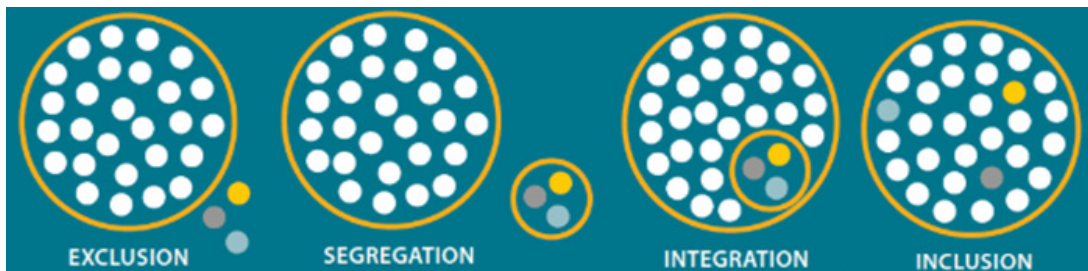
전성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 [공통 질문]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문화정책”



아래의 그림은 포용적(포괄적) 교육과 관련하여 사용된 정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을 문화정책적 관점으로 본다면, 현재 한국사회는 어디에—① 배제, ② 분리, ③ 통합, ④ 포용—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사회가 배제, 분리, 통합, 포용의 어느 유형에 있다면, 향후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데 사회적 또는 정책적 장애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UN(2016),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eneral Comment No. 4

Ⓐ 한국사회의 문화정책은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행복추구권의 관점에서 점점 진화발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행정관청중심의 대형문화이벤트, 문화축제 등은 여전하고, 장르중심, 이익단체중심의 문화행정은 여전히 공고한 가운데, 행정의 하위체계로서의 중간전달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 공모중심 단년도사업, 보조금사업 중심의 사업체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행정에 의한 배제와 분리의 문화정책 관행과 함께 창의성과 혁신성이 행정이 요구하는 체계안에서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행정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지역축제, 무료공연(예. 천원의 콘서트 등) 등은 민간의 활력을 오히려 제약하고, 지역민들에게 문화소비자로서 머물게하며 지역문화인들의 문화생태계 조성을 어렵게한다. 배제와 분리할 의도가 없었다하더라도 ‘보충성의 원칙’을 지키지않는 공급자위주의 문화정책으로 인해 지역문화인의 배제, 분리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할 것이다.

포용사회로 나아가는데 사회적, 정책적 장애요인은 여야, 양당제도로 과잉대표된 정치지형과 여기에 편승한 언론여론지형이 사회전반을 찬반, 편가르기로 나누고 있는 분위기에서 신뢰자본, 사회적자

본 형성 토양이 매우 더덕지고, 취약해져 있는게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행정우위, 관료 우위의 사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의 목적은 사라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의 형식이 중요시되면서 ‘실패하지 않는 행정’, ‘감사에 걸리지 않는 행정’, ‘사실상 실패했으나 성공을 가장한 사업’이 일상화된 관료제 행정이 포용국가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동되고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혁신과 포용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며,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여서 혁신적인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포용은 혁신능력을 높이고, 기술 혁신의 결과(배제)를 보완해주는 상보적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문화정책에서 포용과 혁신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이 상호보완적 관계만은 아닐 것이다.

경제정책에서 선성장-후분배의 낙수효과 정책이 무너진 것처럼 혁신후 포용, 포용후 혁신의 가치 연계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기술혁신은 매우 빠르는데 사회혁신은 느리게 반응하고, 혁신의 주체는 대기업과 플랫폼기업들이 선도하고, 부를 독차지하고,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경제부문은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미 ‘참여를 통한 공유’의 사회가치는 ‘공유’의 힘 관계가 된지 오래되었다. 세계적 수준에서 우버(Uber)택시와 기존 택시업계와 ‘카카오택시’와 ‘타다’의 사회갈등사례만 봐도 AI, 드론, 자율주행차, 로봇, 생명공학, 뇌과학 등 기술혁신이 몰고 올 사회갈등, 제도갈등의 위험은 미증유의 경험일 것이다. 문화산업 영역에서는 기술혁신으로 인한 게임과몰입이 사회갈등의 요인이었던 것처럼, 향후 VR, AR 등의 기술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둘러싼 성의 상품화 논쟁 등이 크게 불거질 것이다.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과 [성장을 위한 혁신]은 분명 다른 기동이다. 혁신을 통해 낙오하지 않도록 포용을 위한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다. 문화정책은 그런 면에서 포용을 위한 혁신이 목표이고, 혁신의 내용은 사회혁신, 공동체혁신이고, 주체는 마을활동가, 지역예술인, 사회적경제 등을 명확히 할 때 포용은 혁신과 상보적 관계에 놓일 것이다.



**문화비전2030(2018.05)과 혁신적 포용국가(2018.09)의 연계지점 및 상호역할 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문재인정부 사회정책비전 3대비전 9대 전략에서 ‘전략7 : 인적자본의 창의성, 다양성 증진’의 수단으로 문화를 통한 혁신능력고양이라는 항목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략3 :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수립’, ‘전략4 : 저출산고령화사회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전략5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창출’, ‘전략9 : 경제, 일자리, 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등 다른 전략들도

문화정책들과 직간접적 상관관계가 큰 부분이다.

‘전략3 :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수립’과 문화비전2030의 ‘의제5 : 지역문화분권의 실현’ 항목의 정책수단은 빈약하다. 균형발전은 자원의 불균형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 소득의 불평등, 인구의 불편등을 바로 잡으려는 자원배분의 양에 관한 것이라면, 분권은 자원배분의 권한에 관한 질의 얘기다. 문화분권의 담론형성이 덜 되어있는 느낌이다.(예를 들면 시도체육회 회장, 문화재단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자치단체장으로 되는 관행, 문화거버넌스의 비민주성 등) 중앙정부차원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이 큰 사건이었다면 지역에서는 문화정책의 일상적 비민주성, 문화전시행정, 문화동원행정의 극복이 지역 문화인들의 오랜 숙원이다.

‘전략4 : 저출산고령화사회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은 문화비전2030의 ‘생애주기별 참여자지원 원칙’에 부합하고, ‘의제1 : 개인의 문화권리 보장’과 연결되어 있다. 리차드 플로리다 교수의 창조계급론이 창조도시 등 도시경쟁전략의 중요한 이론으로 부상했는데 개인적으로 그 이론의 핵심은 ‘라이프스타일’을 관리하는 도시전략으로 읽힌다.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사람을 만나고, 모바일로 소통하고, PC로 업무를 보는 문화가 보편화된 것도 불과 몇년되지 않는다. ‘생애주기’와 ‘라이프스타일’의 관점에서 문화정책을 재조직한다면 생활SOC 문제, 도시재생의 관점, 평생교육의 관점 등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될 것이다.

‘전략5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창출’, ‘전략9 : 경제, 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이 2개로 나뉘어져있지만 ‘전략9’가 산업변화에 따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실업시 소득보장 강화라는 정책수단을 언급한 것으로 보면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존산업 종사자의 실업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선 앤드류 양이 주장하는 것처럼 4차산업혁명은 AI, 드론, 챗봇, 휴먼로봇 등이 지식노동자와 서비스노동자의 일자리를 광범위하게 뺏고 나면 인간은 기본소득으로 배분하고, 공동체와 여가, 문화, 감성을 높이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먼 미래의 일은 아닐 것이다. 이는 돌봄-배움-일-쉼-노후의 생애사이클에서 생겨나는 직업군에 복지정책과 문화정책이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개연성이 가장 크다. 문화비전2030에서 실제적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문화정책제안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세션 2] “혁신적 포용국가, 문화정책의 혁신성 확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혁신적’ 문화정책은 두 가지 측면—① (기존, 새로운) 문화정책 내 혁신(성)의 확대, ② 문화정책을 통한 사회의 혁신능력 확대, ③ 기타(①, ②와 다른 측면)—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정책가운데 어떤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점별(현재-중장기)로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A** 문화정책에서는 혁신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어느 스타트업 전문컨설턴트가 왜 미국의 ‘창고(Garage)’에서는 스타트업이 탄생하고, 한국의 ‘카페(Cafe)’에서는 스타트업이 탄생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다. 그럼 ‘창고’는 혁신이고 ‘카페’는 혁신이 안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 공간의 용도가 분명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대화’는 둘 다 있는데 ‘움직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닐까? 이런 동문서답의 얘기들을 한 적이 있다. 어느 국가의 행복지표에서 사회적유대, 고립성을 묻는 질문에 ‘내가 필요할 때(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 지인이 있는가’란 항목이 있다. 문화지표에서 ‘외롭고 심심할때 1만원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문화공간이 있는가’ 이런 지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문화지표의 설정, 목표, 지표자체가 어찌면 혁신이 아닐까. ‘② 문화정책을 통한 사회의 혁신능력이 확대’ 된다면 ①혁신적 문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혁신적 문화정책, 문화정책의 혁신성 확보를 위한 정책사업 추진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정책영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혁신적 문화정책을 콘텐츠산업 혁신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A** 문화는 경험재라 합니다. 유·초등교육과정과 사회교육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문화다양성 교육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창의문화교육이 최우선 정책이고요. 이를 위한 전문가 양성과 거점별 문화공간 SOC사업이 중요합니다. 일종의 지역의 문화아지트 전략입니다. 공적공간이든 사적공간이든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콘텐츠산업의 혁신은 IT 기술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영국의 창조산업의 핵심인 디자인, 공예는 산업자원부, 도시재생, 건축영역은 국토교통부, 방송·미디어는 방송통신위원회, IT 및 AI, AR, VR, 신기술은 과학기술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등 나뉘어있어 부처별 연계부족은 정말 심각합니다. 혁신성장의 중요한 신산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콘텐츠산업의 혁신성은 필요하지만 게임, K-POP 등에 치우친 편중은 피하고 타 부처와의 융합이 관건일 것입니다.



**혁신적 문화정책, 문화정책의 혁신성 확보를 위한 정책사업의 문화예술생태계 구성원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예술인, 예술단체 및 기관, 문화산업계, 일반 시민의 역할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A** 보충성의 원리, 팔길이의 원리가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문화계만큼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소통의 언어가 다른 영역도 없을 겁니다. 아마 외계인과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부문도 있을 겁니다. 공급자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바꾼다는 관점이 있다면 기존의 경로의존성을 버리고

기획과정, 실행과정에서 완성도 높고, 효능감 있는 문화프로그램(상품)을 만들고, 시민들의 정체성, 자존감을 높이는데 기여할 겁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문화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보아야 할 (국내외) 문화정책사업 사례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최근 서울시가 지방과의 상생협력사업으로 경북도내 괴산, 의성, 문경 등 4개 지역에서 서울 청년이 내려가면 월 220만원의 급여(서울 110만, 해당 군 110만 지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소멸, 저출생, 고령화의 지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의 취지에 동의해서 내년 부터 서울 50%, 행안부 40%, 해당군 10%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일본에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프리랜서 100프로젝트 등 문화예술가, 디자이너 등 시간과 장소에 매이지않는 프리랜서 직업인들을 지역에 유치하고, 배타적으로 수익계약 등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기도 한다. 사실 이 사업의 원형은 1930년대 미국대공황시 뉴딜정책의 하나인 청년(17세~28세) 실업자를 위한 건조지역 2억그루나무심기, 공공공원조성, 보건과 레이레이션 분야 등 특별 일자리프로그램인 CCC(Civilian Conservation Corps)와 화가, 조각가, 음악가, 배우, 작가, 사진가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종합한 WPA(Works Progress Administration)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 프로그램은 당시 5백만 달러가 소요되었는데 예산의 90%가 작가들의 급여로 지급되었고, 제작된 작품은 1966년 가액평가에 따르면 약 4억5천만 달러의 값어치를 가졌고, 소도시주민800만명 가량이 문화예술교육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 정책은 문화공간(생활soc사업과 연계)조성과 디자인, 인테리어, 벽화, 작품설치 등의 공공미술사업과 공간활용 문화예술문화통합권을 이용한 향유와 교육기회확산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지역문화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여겨진다.



**기술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창조적 융합문화예술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핵심 기술과 문화예술의 접목이 논의됩니다. 이 같은 변화에서 문화정책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 문화예술의 접목은 예측하기 어렵다. 기술은 감탄을 자아내지만 감동을 주진 못할 것이다. 실감형 기술의 발달이 개인맞춤형 문화예술 소비를 높일 것이나 아날로그방식의 LP음반, 진공관앰프, 극장식 영화산업이 몰락하지 않는 것 등은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공존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영화 그녀(HER)에서처럼 인간과 AI(챗봇)와의 사랑, 감정교환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배타적 연애감정은 생기는 않는 것은 아직은 디지털의 한계로 보인다.



문화정책의 혁신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어떠한 혁신적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지, 혁신을 위한 문화정책에서의 시민과 국가 간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영역뿐 아니라 사회적경제 영역의 활동가들을 만나면 겨우 공공과 거버넌스를 갖추고, 담당 공무원과 의기투합(?)하려하면 다른 과로 가버린다. 5,6월에 사업해서 11월에 끝내야 해서 실제로 여름때면 일한 시간은 몇 달 안된다. 그러니 성과가 예상되는 부분만 기획하고 일을 하게 된다. 한마디로 문화영역에서 벤처정신은 없고, 실패하지 않는 사업들만 하게 된다. 이런 푸념은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들어왔다. 하지만 거의 개선되고 있지 않다. 비단 문화영역분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업의 기대효과(outcome)는 사라지고, 행정을 위한 행정(output)이 오래동안 진행되고 있다.

문화행정가를 찾아보기 힘들다. 포괄보조사업으로 적어도 3년단위사업, 기획에 예산투입하기, 초기사업계획변경이 용이할 것. 큰 사업의 카테고리만 정하고 풀예산에서 공모방식이 아니라 기획과 컨설팅을 통한 사업제안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폭 바뀌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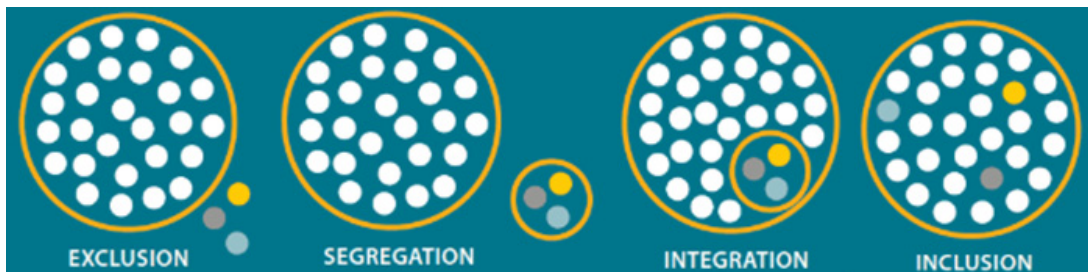
정종은

상지대학교 교수

## [공통 질문]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문화정책”



아래의 그림은 포용적(포괄적) 교육과 관련하여 사용된 정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을 문화정책적 관점으로 본다면, 현재 한국사회는 어디에—① 배제, ② 분리, ③ 통합, ④ 포용—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사회가 배제, 분리, 통합, 포용의 어느 유형에 있다면, 향후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데 사회적 또는 정책적 장애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UN(2016),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eneral Comment No. 4

**A**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사회의 현 상태는 ② 분리와 ③ 통합 사이의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일단 머리 속에서는 통합과 포용의 당위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되었지만, 혐오 범죄와 같은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 소수 민족에 관한 댓글을 살펴보면, 매우 전근대적인 전체주의적 태도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익명의 공간에서 드러나는 자아를 살펴본다면 아직 통합이라는 단계까지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합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집단들 간의 이해 충돌 역시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과정도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외국인 유입 증가로 인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총인구에서 외국인 주민 비율은 2007년 1.5%(722,686명)에서 2015년 3.4%(1,741,919명)로 증가했는데, 근로 목적이 66.4%로써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가족 형성 목적도 25.5%에 달합니다. 하지만

다문화 인식조사(중복응답) 결과(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17), 우리 국민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차별과 편견으로 상처받는 일 증가(54.1%), 사회통합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문화 충돌 발생(38.8%), 한국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증가(35.1%), 외국인 노동자들의 낮은 경제적 지위로 인한 차별의 고착화(31.1%), 일자리를 놓고 외국인과의 경쟁과 갈등 증가(30.3%) 등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여성가족부, 2015)에서도, '외국인 주민을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31.8%로써 다문화사회화를 일찍부터 경험한 국가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을 누리는 권력과의 투쟁이라는 차원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민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일어난 적이 없는 시민혁명을 수차례 겪으면서 일어난 일이지요. 하지만 치열한 경쟁사회가 초래하는 피로감, 각박함, 외로움 등의 개인적 정서 차원의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헬조선'이라는 청년들의 자조적인 표현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옥'에서는 타인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겠지요. 올 초 한-덴마크 포럼에서 덴마크 전문가들은 덴마크의 행복지수 1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본인이 정한 기준과 목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비결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요?



**혁신적 포용국가는 혁신과 포용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며,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여서 혁신적인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포용은 혁신능력을 높이고, 기술 혁신의 결과(배제)를 보완해주는 상보적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문화정책에서 포용과 혁신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개념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혁신은 창조성이 발휘되어 과거의 성과를 뛰어넘는 성과를 도출한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존속적 혁신(sustaining innovation)이나 파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등 혁신의 세부 유형을 살펴본다면, 좀 더 많은 얘기들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성은 어떻게 발휘되는 것일까요? 칙센트미하이와 같은 구성주의자들의 관점에 따르면, 창조성은 어떠한 개인(person)이 자신의 지적인 능력과 정서적인 특질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영역(domain)에 뛰어드는 것으로부터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학습과 실패의 경험을 거쳐 자신이 만들어낸 성취를 현장(field)의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음으로써 완성이 되는 것이죠. 창조성이 완성되는 단계의 성취를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개인-영역-현장의 상호작용 과정을 창조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은 창조성이 발휘되는 지난한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개인과 영역과 현장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모방에서 상상을 거쳐 혁신에 도달하는 단계적 과정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포용성과 혁신성이 긴밀하게 연계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바로 이 과정 때문입니다. 포용적인 사회에서는 아직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인재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의 설익은 생각을 칭찬해주고 실패를 용인하고 나아갈 길을 가이드해 줍니다. 스스로 또 동료들과 함께 자시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문화비전2030(2018.05)과 혁신적 포용국가(2018.09)의 연계지점 및 상호역할 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현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성을 담고 있는 문화비전2030은 문화기본법에 명시된 세 가지 가치, 즉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정책 사업의 방향을 제시했다면, 혁신적 포용국가는 사회 정책과 경제정책의 독자적/분리적 추진의 한계에 대한 기존의 비판을 수용하여 양자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점을 모색하였습니다. 두 문건 모두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필요한 지점을 잘 짚어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새로운 도약을 추동하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더 깊은 분석과 성찰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현황 분석과 대안 모색은 존재하지만, 정책 사업 도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더 근원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야심찬 대안을 마련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분석이지요. 문화비전2030의 수정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역혁신체계’의 관점에서 문화의 범위, 문화정책의 범위를 새로운 차원에서 고민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세션 2] “혁신적 포용국가, 문화정책의 혁신성 확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혁신적’ 문화정책은 두 가지 측면—① (기존, 새로운) 문화정책 내 혁신(성)의 확대, ② 문화정책을 통한 사회의 혁신능력 확대, ③ 기타(①, ②와 다른 측면)—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정책가운데 어떤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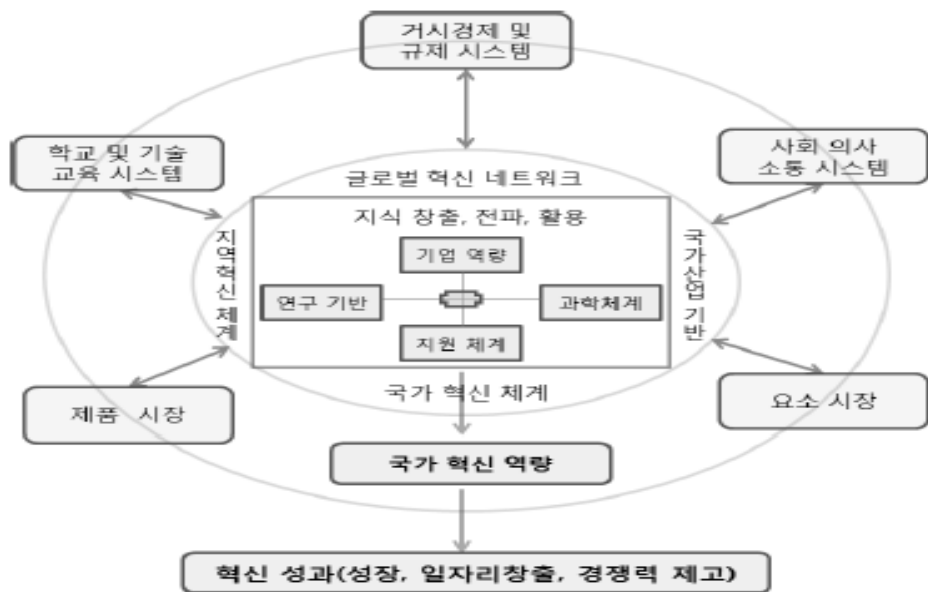
[시점별(현재-중장기)로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A** 저는 문화정책의 혁신과 문화정책을 통한 혁신 모두 동일한 비중으로, 동일한 강도로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국가혁신체계’를 중요한 정책 키워드로 삼았던 사실을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혁신체계는 그 주체와 대상이 너무 커서 실질적인 정책을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차원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지역혁신체계’였

는데, 이 역시 지역의 층위가 너무 다양해서 일률적인 정책을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가혁신체계의 구축은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과 함께 지역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그 속성과 자원을 잘 파악한 상태에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혁신적 포용국가 역시 ‘혁신적 포용지역’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국가 정책과 함께 지역별 세부 정책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고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문화정책이 필요한 것이지요. 혁신에 초점을 맞추자면, 혁신 친화형 문화정책(문화의)과 함께 문화친화형 혁신정책(문화를 통한)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림] 국가 혁신 체계와 지역 혁신 체계

출처: OECD(1999), Managing National Innovation Syst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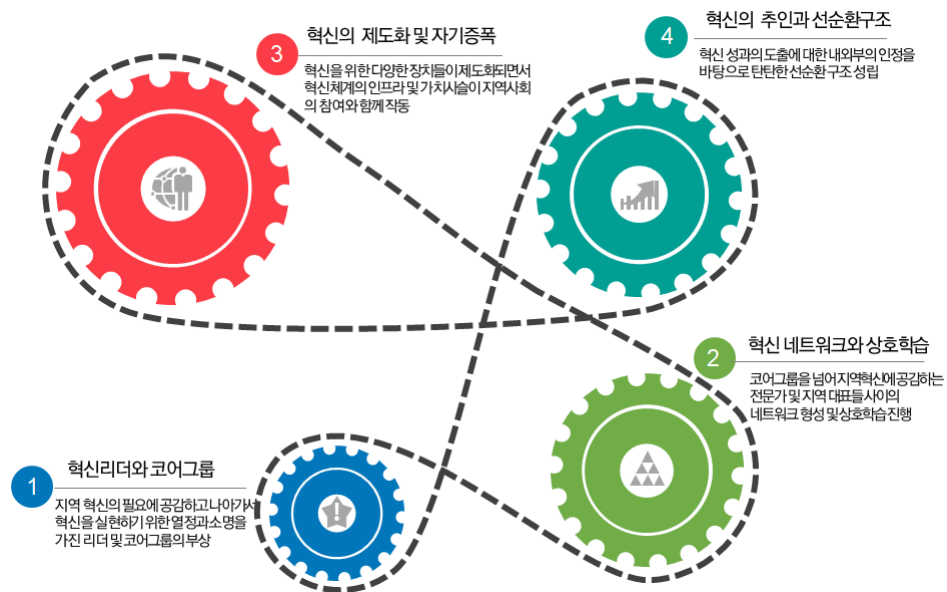
**Q** 혁신적 문화정책, 문화정책의 혁신성 확보를 위한 정책사업 추진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정책영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혁신적 문화정책을 콘텐츠산업 혁신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A** 문화부 정책 영역 중에서 가장 신기술이 많이 활용되는 분야라서 콘텐츠산업에 초점을 맞춘 논의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실감형 콘텐츠 분야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적용될 여지도 많고, 새로운 시장 창출 차원에서 기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언급한, 지역혁신체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문화정책이 향후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어쩌면 기존 영역을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재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역혁신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정종은 외, 2018), 여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역의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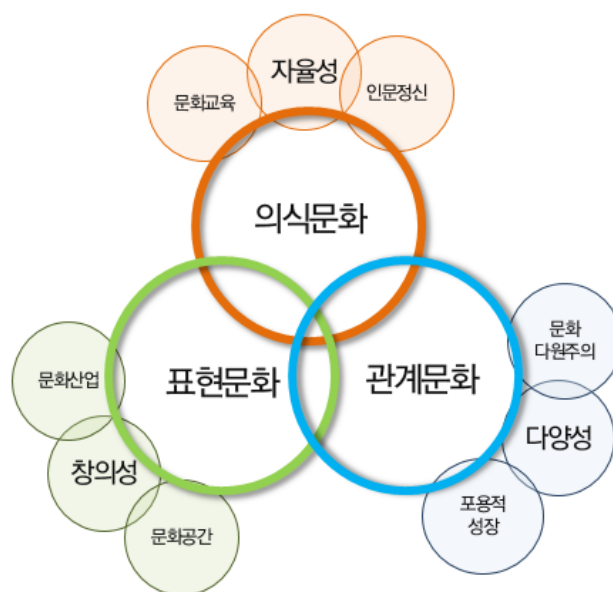
신체계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상당한 시간에 걸쳐 구성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as sector) 내에서 이와 같은 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앞서 언급한 혁신친화형 문화정책 구성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지역의 보다 넓은 의미의 혁신체계에 문화(as style)가 깊이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문화친화형 혁신정책 구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문화 개념, 기존의 문화정책 개념으로는 이러한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내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기존의 문화정책을 좀더 확장하고, 새로운 범주 내에서 기존 정책과 사업들을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림] 국가 혁신 체계와 지역 혁신 체계

출처: 정종은외(2018)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문화정책 연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그림] 문화(정책)의 세 층위 (출처: ibid)

- \* 표현 문화: 예술, 전통문화, 문화산업 등 시각-청각-시청각 문화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공간과 산업의 질을 혁신하고, 지역 혁신을 대내외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영국의 '창조산업 정책'의 전 세계적 유행에서도 알 수 있듯이 '표현 문화'는 지역공간의 문화화와 지역산업의 문화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 관계 문화: 이러한 창조성은 언제나 다양성을 토양으로 해서 자라날 수밖에 없음. 지역의 보수성, 지역 토호세력의 폐쇄성 등의 표현에서 종종 제기되는 문화적 퇴행성은 바로 이러한 관계 문화의 충위를 일컫는 것임. 지역혁신 생태계의 공진화를 위해서는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문화를 넘어서, 문화 다원주의에 입각한 차이에 대한 존중, 양적 성장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함께 하는 성장, 포용적 성장에 대한 인식 공감의 필수적임
- \* 의식문화: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개방적인 태도는 '자율성'을 토대로 삼는 의식문화의 건강한 성장을 통해서 훈련되고 익혀지는 것. 문화예술교육 정책이나 인문정신문화 정책은 이와 같은 반성적 관점에서 전인적인 성찰과 참여를 자극하고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짐. 표현문화와 관계문화보다 그 성과가 덜 가시적일 수 있지만, 의식문화가 지역혁신 생태계에서 갖는 의의는 절대 덜하지 않음



**혁신적 문화정책, 문화정책의 혁신성 확보를 위한 정책사업의 문화예술생태계 구성원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예술인, 예술단체 및 기관, 문화산업계, 일반 시민의 역할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A** 위의 모든 구성원들은 혁신체계에서 나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컨대, 공공영역에서 지자체가 감당할 일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며, 중앙정부는 지자체를 격려하고 가이드하는 차원에서 역할이 더 커질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탑다운이나 바텀업 방식이 아니라 미들-업다운 방식에서 혁신리더와 코어그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혁신체계의 단계적 구성 과정에서 혁신리더와 코어그룹의 존재보다는 그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 사회에 혁신네트워크가 구축되는지,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서 상호학습이 이루어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역의 혁신리더와 코어그룹들이 새로운 학습 방향과 방법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다보스 포럼이 '4차 산업혁명' 담론을 제시하면서,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21세기 기술(skills)'이라는 표제아래 새로운 기술 혁명 시대의 인재상과 관련된 주요한 영역들을 기초문해 영역, 역량 영역, 인성 자질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추 수 있도록 어떻게 학습 기회와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다보스 포럼은 2016년에, 2015년 보고서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21세기 기술'에 표현된 지식, 역량, 태도 등을 습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회감정 학습(SEL: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이란 키워드를 제시하였습니다. 사회적인 학습과 감정적인 학습이 개인적인 인지적 학습과 병행됨으로써만 기본적인 문해능력의 습득(mastery)을 넘어 역량 부문과 인성 자질

부문에서 균형있는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인데요, 교육 혁신 또는 학습 혁신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된 내용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7)



[그림] World Economic Forum(2015) 21세기 기술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6) / World Economic Forum(2015)



[그림] 모든 스킬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출처: World Economic Forum(2016)

- 7) 놀이 기반의 학습을 독려해야함 / 학습을 서로 연계성을 갖는 보다 작은 단위로 쪼개야 함 / 학습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함 / 성장 마인드셋을 개발해야 함 / 복돋아주는 관계를 활성화해야 함 / 집중할 시간을 보장해야 함 / 적절한 칭찬이 제공되어야 함 / 주제에 관한 발견을 가이드해 주어야 함 / 자신의 인성과 강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 / 적절한 도전을 제공해야 함 / 상호적인 참여 속에서 관심을 보여주어야 함 / 명시적인 기술(skill)을 겨냥한 분명한 학습 목표를 제공해야 함/ 직접 해보는(hands-on) 접근법을 활용해야 함



##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문화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보아야 할 (국내외) 문화정책사업 사례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지역혁신체계라는 렌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저는 청년 창업 활성화라는 과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2016년 문화융성포럼을 기획하여 진행할 당시에, 저희는 깊은 숙고를 거쳐 영국의 어셈블을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20대~30대 청년 화가, 건축가, 기획자 등 18명으로 이루어진 영국의 젊은 예술가 그룹인데, 이들은 2015년 영국 최고 권위 미술상인 Turner Prize 수상을 통해 전 세계적인 유명인사로 떠올랐습니다. ‘도시, 청년, 미래를 위한 새로운 협업 시스템’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서 이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서로 협업하는지, 어떻게 주민들과 함께하는지, 어떻게 사업을 확대하는지에 대해 흥미로운 관점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조직이 어떻게 원주에서, 강원도에서 많이 나올 수 있게 도울 것인가가 저의 최근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 ■ 지역 주민들과 협업 : 그랜비 워크숍과 주택 리모델링

- 어셈블은 직접 지역 주민들을 채용하고, 교육시켜 주택에 사용할 물건을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물건은 그랜비 개발 사업에 사용하고 일부는 일반 대중에게 판매
- 이 프로젝트에 있어 어셈블의 두 가지 목표는 1) 새로운 고용기회를 만드는 것 2) 이 지역을 변화시킨 공동의 창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임
- 현지에서 12명을 채용하여 팀을 구성하고, 이후 주택 프로젝트에 사용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집중 개발 시간을 보냄
  - 단순한 재료와 구조를 사용하면서 주민들에게 단지 고용의 기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주변 환경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이 더욱 고취됨
- 이 작업의 목표는 다양성으로, 모든 작업이 창조적이며 교육적인도구가 되도록 노력함. 워크숍의 모든 제품들이 다 다르며 만드는 일 자체를 즐거운 사회활동처럼 진행하였음

### ■ 그룹 협업의 다양한 사례

- 골드스미스 대학 의뢰를 통해 디자인한 미술 갤러리 : 사우스 런던 지역의 고대 빅토리아 시대 양식의 대중목욕탕 내부에 갤러리를 만들 예정이며, 10세기 대중목욕탕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공간들을 활용
- 폴리 포 어 플라이오버(Folly for a Flyover) : 목구조로 된 임시 영화관이자 행사공간으로서 활용도가 낮은 고속도로 다리 하부의 가능성을 보여준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때 방치되었던 공간에서 9주 동안 다양한 음악, 영화, 연극 등이 프로그램이 선보임
- 블랙호스 워크숍(Blackhorse Workshop) : 공공 제작소로서, 기본 아이디어는 ‘도구 도서관’을 제공하는 것. 블랙호스 제작소는 우리가 집에서 자체적으로 구비할 수 없는 다양한 도구를 구비하고 있음
- 런던외곽의 공공 광장 : 1930년대에 농경지였던 이곳은 곧 가든 빌리지(Garden Village)라는 마을로 조성되고 런던의 슬럼가 지역 주민들이 이곳으로 이주함. 임대주택만으로 꽉 들어차게 되면서 다른 런던 지역으로부터 고립되고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 이에 어셈블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광장을 만들어 지역사회 행사, 여가 활동 및 놀이 등의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

- 시네롤리움(Cineroleum) : 어셈블의 최초 프로젝트인 주유소 영화관으로서, 차량 사용이 줄고 연비 좋은 차가 늘어나면서 주유소들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데, 어셈블은 여기에서 기회를 봄. 그들은 클러큰웰(Clerkenwell)가에서 주유소를 발견, 2010년 여름 이 주유소를 영화관으로 탈바꿈시킴
- 시네롤리움은 과거의 고전 영화 상영관에 대한 향수를 담아 재탄생 되었으며, 저렴한 산업용, 재활용 또는 기부된 자재들을 사용하여 만들어짐



기술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창조적 융합문화예술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핵심 기술과 문화예술의 접목이 논의됩니다. 이 같은 변화에서 문화정책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저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문화정책의 대응은 단순히 기술-일자리-교육 트라이앵글을 좇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culture) vs 자연(nature)이라는 구도 속에서 태어난 문화정책은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짐승과 구분되는 ‘교양인’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삼아 발전해왔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라는 범용기술이 이끄는 4차산업혁명은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며 학습하는 ‘제2의 기계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초연결사회의 초개인화된 시민-소비자(citizen-consumer)들은 짐승과 구별되는 교양인에 머무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혁명을 거치면서 ‘자신의 신체와 정신의 일부를 기계화한 사이보그’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새로운 인류, 그들의 새로운 문화정체성을 고민하는 역할을 문화정책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든 부처에게 문화부가 제공해야 할 반성과 성찰의 주제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단위의 문화정책 추진과정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문화정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지역 단위에서 추진되는 문화정책 사업 가운데 주목해야 할 사업 또는 개선되어야 할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혁신적 포용국가는 혁신적 포용 지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정책 사업은 아마도 지역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화부의 역대 사업들 중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이 정도 규모로 추진된 사업이 있었나요? 적어도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이렇게 주목했던 문화정책 사업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지역문화생태계와 지역혁신생태계가 만날 수 있는 여러 지점들이 다각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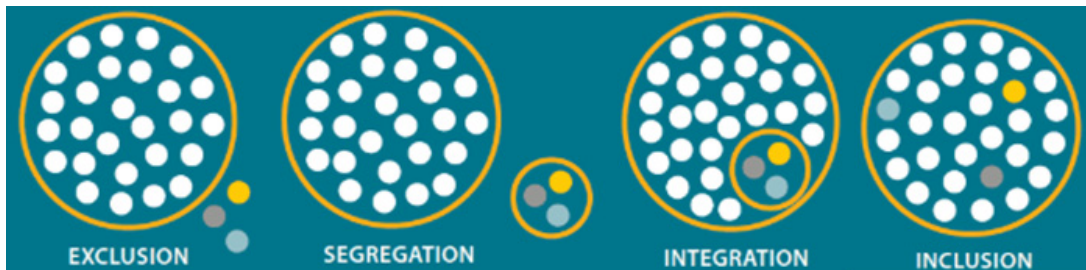
한종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 [공통 질문]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문화정책”



아래의 그림은 포용적(포괄적) 교육과 관련하여 사용된 정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을 문화정책적 관점으로 본다면, 현재 한국사회는 어디에—① 배제, ② 분리, ③ 통합, ④ 포용—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사회가 배제, 분리, 통합, 포용의 어느 유형에 있다면, 향후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데 사회적 또는 정책적 장애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UN(2016),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eneral Comment No. 4

**A**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한국 사회가 통합과 포용보다는 배제와 분리의 문제를 아직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설사 어느 특정 비교부문에서 한국 사회가 좀 더 나아진 수준에 도달했다는 정량적 지표가 있다 하더라도 문화정책이 통합과 포용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정책적 명제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절차를 약속했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글로벌 스탠다드’ 라는 이름 아래 신자유주의 흐름에 맞춰 기존 시스템을 시장 경쟁 위주로 전면 개방-개편한 이래 한국 사회는 글로벌 무한 경쟁 무대에 아무 보호막 없이 노출 되면서 성장하는 곳은 더 크게 성장한 반면 그 흐름에 뒤쳐진 기업이나 개인은 끝없는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됐고, 교육-금융-의료 등 사회 시스템은 이런 격차를 완화하고 절충하기 보다는 오히려 확대재생산 하고 그 격차를 고착화 하는 방향으로 작동을 해왔다.

포용사회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정책을 한 두 가지로 국한 할 수는 없다. 바꿔 말하면 문화정책만으로 한국 사회를 포용사회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경제와 산업, 복지와 노동, 교육과 문화, 정치와 행정 등 모든 부문에서 기존 정책철학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시장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정책기조를 추구하면서 그 연장선에서 포용적 문화 정책을 도입하려 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정책 기조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혁신과 포용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며,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여서 혁신적인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포용은 혁신능력을 높이고, 기술 혁신의 결과(배제)를 보완해주는 상보적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문화정책에서 포용과 혁신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의적 문화 환경의 조성이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창의적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분리나 배제 없이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포용적 문화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포용정책을 기술혁신으로 인한 배제를 보완하는 관계’로 보는 것은 상관성은 인정되나 인과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우리 사회에서 포용적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과도한 ‘기술혁신으로 인한 배제’ 때문 만인지는 의문이며 우리 사회는 여전히 기술혁신의 ‘과잉’ 보다는 ‘결핍’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고 하는 게 더 현실적인 진단이 아닐까 한다. 그보다는 다양한 차별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제와 분리의 문제를 완화하고 해결하는데 포용적 문화정책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럼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혁신이 보다 장려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혁신은 숙명적으로 기존의 레거시를 극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을 포기할 수 없다. 혁신은 과거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레거시를 기반으로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도입해서 스스로를 갱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구조에 익숙한 사람들이 혁신의 길로 합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혁신정책의 하나이며 포용국가로 이어지는 길이기도 하다. 혁신의 기회가 가급적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혁신적 포용, 혹은 포용적 혁신의 정책이라고 본다.



**문화비전2030(2018.05)과 혁신적 포용국가(2018.09)의 연계지점 및 상호역할 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문화비전2030은 정부 주도 정책 일변도였던 과거 정부의 문화정책과는 확연히 대비될 만큼 능동적인 측면들을 많이 담고 있다. 다만 문화비전이 표방하는 ‘사람이 있는 문화’와 혁신적 포용국가 전략

에서 추구하는 ‘모두가 잘 사는 사회’의 명확한 연계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 두 가지 비전의 연계지점을 찾기 위해서는 ‘사람’, ‘모두’라는 추상적 공통점 찾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를 통한 어떤 혁신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칫 생활문화 운동의 하나로 전략할 수도 있다.

문화정책을 통한 창의성의 확산과 혁신역량 강화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에 의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가능케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하드웨어의 혁신은, 굳이 스티브 잡스를 인용할 필요도 없이 인간의 창의성에서 발현되는 것이다.

문화비전 9대 의제 가운데 ‘의제7 : 문화자원의 혁신역량 강화’ 항목에서 ‘창의성과 상상력을 갖춘 시민-인재 양성’과 ‘문화자원 융합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언급한 것이라든가 ‘의제9 :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 혁신’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한 공론-학습-해결의 문화 플랫폼 모델 확산’ 등 창의성 육성을 위한 사회정책적 과제들을 제시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 [세션 2] “혁신적 포용국가, 문화정책의 혁신성 확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혁신적’ 문화정책은 두 가지 측면—① (기존, 새로운) 문화정책 내 혁신(성)의 확대, ② 문화정책을 통한 사회의 혁신능력 확대, ③ 기타(①, ②와 다른 측면)—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정책가운데 어떤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점별(현재-중장기)로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A** 혁신은 기존의 것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발견하고 이를 뛰어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혁신의 핵심 동력은 기술과 문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술이 스스로의 관성으로 계속 선진화-고도화 할 수도 있지만 이를 기술혁신이라 부르지는 않는다. 새로운 기술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꿔 놓을 때 진정한 혁신이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과학기술의 진정한 혁신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히려 문화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삶과 사회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는 문화적 토대 위에서 과학기술의 혁신은 그 가치를 꽃피울 수 있다.

기술은 도구적 측면이 강하지만 문화는 인지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있어서 결코 기술에 뒤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기술혁신의 모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혁신을 장려하는 문화정책은 그 자체로 혁신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문화정책 내 혁신성’과 ‘문화정책을 통한 혁신능력 확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혁신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은 문화정책이 다른 영역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을 것이며, 문화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혁신적 사회 변화의 실험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창의적 사회혁신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며 소프트웨어를 키우기 위해서는 (=소프트파워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 분야의 혁신과 창의성 강화’와 동시에 ‘문화에 의한 다른 분야에서의 혁신과 창의성 강화’를 동시에 필요로 한다.



**혁신적 문화정책, 문화정책의 혁신성 확보를 위한 정책사업 추진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정책영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혁신을 위한 문화정책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90년대 말 영국에서 본격화 된 창조경제(creative economy) 모델이다. 서구의 학자들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경향적 이윤률 저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새로운 생산요소로서 인간의 창의성(creativity)에 주목했으며 게임 영상 등의 문화 콘텐츠 영역에서 시작해 소프트웨어와 ICT 영역 전반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갔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문화정책 차원의 투자는 21세기 기술혁신 경쟁에서 서구의 주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준 핵심적인 동력이 되어주었다.

문화가 기존 사회구조의 후행적 산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를 뛰어넘고 새로운 사회의 단초를 암시하는 선행적 측면을 함께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혁신적 문화정책은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을 가능케 하는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혁신이 초래할 변화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 그 한계를 보완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일 또한 혁신적 문화정책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다.



**혁신적 문화정책, 문화정책의 혁신성 확보를 위한 정책사업의 문화예술생태계 구성원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예술인, 예술단체 및 기관, 문화산업계, 일반 시민의 역할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A** 정책적 목표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주체라는 점에서 문화정책의 1차적 당사자는 당연히 정부와 지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이를 모니터 해서 더 좋은 정책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다. 그런데 정부의 역할이 과도하게 확장될 경우 민간의 혁신성과 자율성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와 문화산업계의 관계에서 정부의 예산 지원은 민간의 혁신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할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얻기 위한 민간의 혁신 활동을 왜곡하거나 혁신의 노력을 위축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항상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정부-지자체와 시민사회의 관계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의 top-down 정책과 민간의 bottom-up 혁신 노력이 만나는 접점에서 중간지원조직은 정부와 시민사

회가 소통하고 입장차를 조정하며,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목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중간지원조직은 정부의 예산회계 제도와 행정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면서 동시에 민간의 활력과 창의성이 위축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줄 수 있어야 한다. 이 역할을 관변단체나 외주업체에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부-지자체 예산의 효율적 집행 역량의 축적을 가로막고 정책 목표의 원만한 달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67번이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만들자는 것이었고, 2018년 9월에 발표된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에서는 '수동적 소비 위주의 문화정책'을 '능동적 참여를 위한 문화정책'으로 전환할 것임이 천명되었음. 이는 지역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새롭게 싹트고 있는 생활문화의 트렌드를 적절히 건드린 것이라 생각됨. 특히 최근 로컬을 무대로 성장하고 있는 생활문화형 창업 활동들은 톱다운으로 부려지는게 아니라 밀레니얼 세대 청년들의 취향과 관심이 지역에 내재된 가치들과 결합해 창의적인 형태로 꽃을 피우고 있음. 이런 정책이 천명되는 것 만으로도 문화정책이 포용을 향해 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함.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는 여전히 지역의 생활문화 기반 활동들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해 좀 더 관심이 필요.



####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문화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보아야 할 (국내외) 문화정책사업 사례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최근 들어 로컬을 기반으로 활성화 하고 있는 다양한 혁신적 창업의 움직임은 낙후하고 소외된 지역의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플랫폼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포용국가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 매우 의미미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로컬 크리에이터'라 불리고 있는 창의적 청년 창업자들은 밀레니얼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힙한 생활문화 가치를 구현하는 다양하고 실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전국 각지에서 선보이고 있다. 이는 산업화 세대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탈물질주의와 개인주의적 속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문화비전 2030은 핵심 키워드인 '사람이 먼저'라는 관점에서 '사회 갈등 해소와 사회 통합의 문화정책'을 표방하고, 이를 위해 당연하게도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가치가 공존'하며, 특히 중앙(수도권)에만 집중되지 않고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을 살린 분권형 문화정책을 천명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젊은층의 지역 이탈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더욱 부채질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젊은층이 선호하는 고급 문화 혹은 대중 문화 자산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자체는 지역민들이 향유하고자 하는 문화자산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문화정책적 배제-분리-고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가 '찾아가는 문화의 날' 행사 몇 번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외부의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원과 인프라가 집중되어 최적의 창업-투자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수도권 중심으로 좋은 인재가 집중되면서 지방의 혁신 생태계는 더욱 더 황폐해지고 있으며 투자 지원 체계는 불모지나 다름이 없다. 기술과 문화의 융합을 통한 혁신적 문화예술 사업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지역 거주민들에게는 향유의 기회가 제한된다.

장기적으로 지역 혁신의 주체가 될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의 역량을 성장시켜주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산업화 세대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훨씬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며 사회 전체적으로 새로운 소비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들이 공유하는 취향소비, 배달문화, 혼밥과 혼술, 반려동물 선호, 유기농과 핸드메이드 크래프트 지향 등등의 가치들은 미국 서부 중심의 힙스터 문화의 정신과도 대체로 일치하며 그 자체로 혁신적인 가치를 내포하는 것들이다.



**기술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창조적 융합문화예술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핵심 기술과 문화예술의 접목이 논의됩니다. 이 같은 변화에서 문화정책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새로운 기술과 문화예술의 접목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예술의 창작과 소비의 전 과정에서 기술은 기존에 가능하지 않았던 새로운 경지를 열어주고 있다. 문화예술은 기술의 진화를 자극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콘텐츠는 디바이스-네트워크-플랫폼으로 이어지는 기술산업의 기반이 최종적인 소비자 혹은 생산자를 만나 그 가치를 꽃피우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문화산업 자체의 성장을 촉진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손쉽게 접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적-문화정책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술과 문화예술의 접점에서 다양한 융합의 실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가치를 구체화 하고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혁신적 문화정책’이라는 개념을 ‘기술혁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위주로만 보는 것은 자칫 기술만능주의적 관점에 함몰될 수 있다. 기술혁신이 사회-경제-문화 모든 분야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어떤 기술이 필요하며,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도록 할 것이며, 우리 사회가 그 기술 및 산업을 어떻게 관리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 즉 4차 산업혁명에서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파워(교육 과학 기술 문화 예술)의 강화가 필요하지만 문화정책을 그에 복무하는 도구적 관점으로만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술 혁신의 속성인 승자독식으로 그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되며 초국경적 속성으로 인해 국가정책의 적용대상에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소수의 기술 엘리트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나머지 대다수는 분리와 소외의 영역에 머무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 영역과 비교하여 타 영역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 또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곧 혁신과 포용을 위한 정책사례, 그리고 그것이 문화정책에 함의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빈부격차와 세대 갈등, 보수진보의 대립, 마이노리티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포용적 문화정책, 포용적 경제-산업정책, 포용적 사회정책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을 정도이다. 각 분야의 정책이 유기적 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포용국가의 정책 목표도 달성이 가능하다.

포용의 정책적 대상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혁신과 포용의 측면에서 가장 주목되는 정책의 흐름은 ‘로컬’이라는 키워드로 전개되는 일련의 정책들이다. 중앙집중형 국토 전략 속에서 로컬은 자원의 수도권 집중, 젊은층의 이탈과 급속한 고령화, 산업기반의 공동화 속에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다양한 지역산업 정책을 펼쳐 왔지만 대부분 톱다운 방식의 이식형 산업 육성 정책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고 그나마 일부 거점지역에 자리 잡은 자동차-철강-조선-석유화학 등 기간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해당 지역 경제의 기반이 송두리째 붕괴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는 지역 기반의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창조경제 정책을 펼쳤고,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혁신주도성장론으로 창조경제 정책을 발전적으로 이어가는 한편으로 도시재생뉴딜정책을 통해 로컬 주요 도시의 원도심을 재생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 행안부는 소셜벤처와 리빙랩 방식의 사회혁신을 장려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며 중기벤처부는 로컬크리에이터가 주도하는 지역혁신 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의 시사점은 우리 사회가 성장일변도의 산업화 시대의 가치체계에서 벗어나 개인주의와 탈물질주의 가치 중심의 새로운 흐름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런 흐름이 밀레니얼 세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70년대 미국 서부에서 자본주의의 물질만능주의에 대항해 형성된 히피문화를 기반으로 창의적 혁신운동이 일어났고 그 흐름이 실리콘밸리의 혁신창업 문화로 이어진 것처럼 한국에서도 새로운 창의적 혁신문화가 싹트고 있으며 이는 혁신적 문화정책 산업정책의 방향정립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끝)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tarting from the quill and extending across the page.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tarting from the quill and extending across the page.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tarting from the quill and extending across the page.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tarting from the quill and extending across the page.